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e Against The
Emergence of Chinese Naval Capabilities



2019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군사학과 해양안보정책전공

오 현 석

本 論文을 吳賢錫의 政策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印)

委員 (印)

委員 (印)



2018年 1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v
국문초록	ix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2장 중국의 해군력 현황	5
제1절 중국 군사정책과 전략의 변화	5
I. 중국의 국가전략	5
II.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7
III. 반접근/거부(A2/AD) 전략	13
제2절 중국의 해양전략과 정책의 변화	14
I. 중국의 해양전략	14
II. 중국 해군의 부상	22
제3절 중국 해군의 현대화	24
I. 중국군의 변화와 현대화	24
II. 해군의 현대화와 전력증강	26
제4절 평가 및 전망	32
제3장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미치는 영향	38
제1절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38
I. 동북아 지역안보의 변화	38

Ⅱ. 동북아 긴장고조 및 군비경쟁 가속화	42
Ⅲ. 동북아 해양전략 및 해군력 군비경쟁 강화	45
제2절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48
제4장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대응방안	52
제1절 동북아 지역국가 간 협력적 해양안보체계 구축	53
제2절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58
제3절 해양정책 강화 및 해군력 증강	60
Ⅰ. 주변국에 대응하는 해군력 증강	62
Ⅱ. 동북아 해양안보에 대응하는 해군기지 확보	66
제5장 요약 및 결론	70
제1절 요약	70
제2절 결론	71
참고문헌	74



표 목 차

<표-1> 중국 군사전략의 변천	12
<표-2> 중국의 3단계 발전전략	17
<표-3> 중국국방백서에 나타난 해양안보에 대한 인식	18
<표-4> 중국 해군의 3단계 발전계획	27
<표-5> 중국의 국방비 증가 추세	32
<표-6> 중국의 디젤 및 핵잠수함 증강현황	34
<표-7> 중국·미국·일본의 국방비 비교	43
<표-8> 한국-미국-일본-중국 해군의 이지스함 능력 비교	47
<표-9> 한국 해군 퇴역함정 양도현황	57
<표-10> 한국 주변국 해군력	61

그 립 목 차

<그림-1> 중국의 단계별 해양방위 경계선 확장 전략	14
<그림-2> 중국 해군의 해양방어권 개념도	20
<그림-3> 중국의 해상실크로드와 ‘진주목걸이’ 전략	23
<그림-4> 중국군 구조 개편	25
<그림-5> 중국군 배치현황	26
<그림-6> 중국 해군의 주력 전투함	28
<그림-7> 중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 구축함	29
<그림-8>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30
<그림-9> 중국의 전략핵잠수함 및 탄도미사일	31
<그림-10> 중국전투함 전력보유 추세	34
<그림-11> 중국 해군 함정 현대화 비율 추세	35

<그림-12>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열점 지역	39
<그림-13>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41
<그림-14>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지역	44
<그림-15>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및 중국의 인공섬 건설현황	46
<그림-16> 한국 해군 잠수함 현황	64
<그림-17> 한국 해군 기동전단	65
<그림-18> 이어도와 각국 주요 해군기지간 거리 및 소요시간	67
<그림-19> 동북아 해양전략 구조	68



A Study on The Response Against The Emergence of Chinese Naval Capabilities

by Oh, Hyoen Seok

Major in Maritime Security and Policy

Department of Naval Study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China is awakening. It has recovered its past glory as 'Jungwon(The Center of a field or County)' and emerged as a superpower with the United States, it is heading towards the sea, not just on the continent. So how should the nearest Korea respond? It is time to prepare for the expansion of the maritime power based on the rise of China, especially naval power.

China has experienced an average growth rate of 9.7% for about 30 years since its reform and opening in 1978, As of 2018, it has grown by 6.9%, exceeding the previous year's average in five years since 2010, in 2017, China's GDP reached \$ 827 billion, making it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after the United States. The 21st century is the period when the military rise is noticed after the

economic rise of China, the modernization of Chinese military power based on the defense budget has raised concerns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in neighboring countries in terms of size and speed, in particular, we need to pay attention to increasing the impact on the ocean and enhancing naval power.

What is the situation in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where China is emerging as a military force. The situation compared with the country and the movement of China are noteworth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world is entering a world without borders, but in East Asia, the accelerated new Cold War regime of arms race is accelerating, in particular, conflicts between nations centered on the ocean have not shown any sign of resolution. At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the only superpower, is continuing its policy of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its hegemony, China, which is opening the G2 era based on economic growth, is pursuing a policy to check U.S. hegemony and transform international order into a multi-polar system.

Russia is also emerging as another powerful country to rebuild its economic and military power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Japan is also trying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the Self-Defense Forces to become an ordinary country. As such, conflict exists in promoting different security policies in Northeast Asia.

In this scale of invisible power in the surrounding powers of the Korean Peninsula, China's movement is most remarkable. China's Defense Ministry released the 'China Defense White Paper in 2015'. Unlike the previous name for 'diversifying Chinese armed forces'. In the 2015 China Defense White Paper, the Chinese military built a

strong military force that matched the new form, emphasized accelerating the modernization of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forces by implementing "polar defense strategies." In addition, the president's right of government and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re top priorities. With light but also the dominium conflict with a country of the South China Sea, including Vietnam, the Philippines, Japan strongly shows the hostile and also criticism about the Diaoyu Islands and other issues. This indicates China's military will to respond firmly to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both in terms of sovereignty and territory, and to present a threatening attitude toward its counterpart.

To that end, China is focusing on expand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 with its military strategy focused on the 'A2/AD' strategy that denies access to the U.S. following the 'win war under advanced weapons', this aggressive military strategy of China is seen as a major threat to East Asia. This trend in China is not unique to neighboring countries. China's diversification of its armed capabilities in terms of sovereignty and territorial defense means it could have an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in connection with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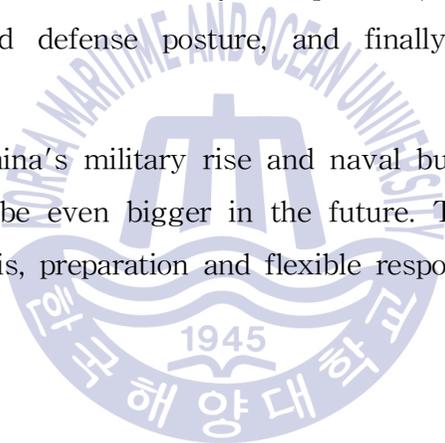
If China exerts its influence in conjunction with the territorial claims of the South China Sea, such as control of navigation in the waters, it will seriously disrupt Korea's maritime international and economic activities and exchanges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direct friction with China will also be inevitable if China causes a challenging dispute over its jurisdiction and over Korea over the EEZ.

So how should Korea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especially in the bilateral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in the movement to strengthen China's military and naval forces?

There have been some changes in recent years, but Korea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in Northeast Asia under the threat of North Korea, under this structure, we should buil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promotion of diplomatic and military relations with the U.S., a traditional ally of the U.S., and China. Therefore, we should pay attention to responses by strengthening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trengthening the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finally strengthening the naval forces.

The threat of China's military rise and naval buildup has become a reality, and it will be even bigger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time for thorough analysis, preparation and flexible response.



국문 초록

중국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中原’이라 자부하던 과거 중국의 영광을 회복하여 미국과 함께 세계의 초강대국(G2)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근거리에 인접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중국의 부상, 특히 해군력 증강을 바탕으로 한 해양력의 확장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지난 약 30년 간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18년 현재 6.9%의 성장률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전년도 평균치를 웃돌게 되었으며, 2017년 중국의 국민총생산(GDP)은 8조 270억 달러로, 미국(16조 2천446억 달러)에 이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1세기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이어 군사 분야에서 부상이 주목되는 시기이며 국방예산을 바탕으로 중국 군사력의 현대화는 그 규모와 속도 면에서 미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특히, 우리는 해양으로의 영향력 확대와 해군력 증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서는 어떠한가? 국가별 현황과 중국의 움직임이 무엇보다 주목된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 시대에서 세계는 ‘국경 없는 세계’가 도래하고 있지만 유독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군비경쟁의 가속화되는 ‘신 냉전 체제’가 가속화 되고 있고, 특히 해양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국가 간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냉전의 종식에 따라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G2 시대를 열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국제질서를 다극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구소련 멸망 이후 경제력과 군사력을 재정비하며 또 다른 강대

국으로 부상중에 있으며, 일본 또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법제화 및 자위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의 강대국들은 서로 다른 안보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갈등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보이지 않는 힘의 저울질 속에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중국 국방부는 '2015년 중국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사용하던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화 운용'이라는 명칭과 달리 '중국 군사전략'이란 제목을 부여했다. 2015년 중국 국방백서에서는 중국군은 '新形勢'에 부합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적극방어 군사전략'을 이행하며, 국방 및 군사력 현대화를 가속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주권과 안보·영토 보존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베트남, 필리핀 등 남중국해 연한 국가와의 영유권 분쟁, 일본과의 조어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비난하며 적대적인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주권과 영토차원에서 동,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분쟁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군사적 의지를 표시하며 상대국에 대한 위협적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군사전략의 기본원칙을 '첨단무기 기반 하 제한전쟁에서 승리'에 이어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반접근/거부(A2/AD) 전략'에 두고 동, 남중국해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국지전쟁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확대하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런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전략은 동아시아 지역의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주변국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중국이 주권과 영토 수호에 대하여 무장역량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은 해양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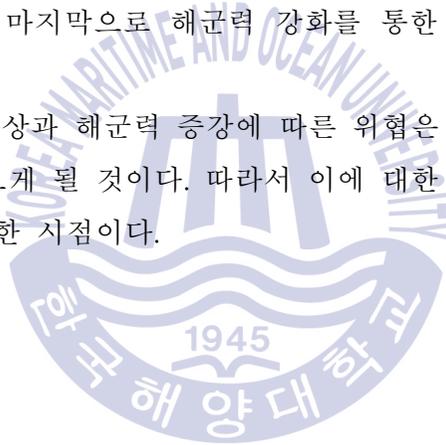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해 주장과 연계하여 이 해역의 항행통제 등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해양에 의존하는 한국의 국제·경제활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중국이 한국과의 EEZ에 대한 경계획정과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도전적 분쟁을 야기한다면 중국과의

직접적인 마찰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급변하는 국제정세, 특히 미국과 중국의 양자대결 구도와 중국의 군사적 부상 및 해군력을 강화하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최근 다소 변화가 있지만 한국은 북한이라는 당면한 위협 아래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4강의 외교·군사적 영향을 받는 입장이며 이런 구조 속에서 진정 추진해야 할 방향은 전통의 우방인 미국과 잠재적 위협국인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기본으로 주변 4강과 외교 및 군사관계 증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해양 정책 강화 및 해군력 증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자간 안보협력 강화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마지막으로 해군력 강화를 통한 대응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해군력 증강에 따른 위협은 현실이 되었고, 미래에는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 미·소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미국중심의 체제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G2 체제로 전환되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2009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점점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서는 세계의 현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중국은 최근 국방비를 매년 평균 10% 이상씩 증가시켰다. 2017년 중국의 공식 국방예산은 1,45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규모이며, 또한 1989년 이후 2010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는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의 공식 국방비는 미국의 1/4수준이지만 2020년경에는 1/3수준까지 따라 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4배 이상 앞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북아에서 엄청난 세력 균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¹⁾

중국이 냉전 종식으로 인해 자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첨단무기를 구입하는 등 군 현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동북아에서 구소련의 몰락과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약화로 초래된 힘의 공백을 메움으로서 이 지역에서의 패권을 추구하겠다는 의도가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후 아태지역,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 지역 국가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중국은 아태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국으로 많은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이 지역의 잠재적 충돌 요소에 모두 관련을 가지고 있어 그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²⁾

1) 심석영, 「시진핑 시기의 중국군 현대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2016.12), 1쪽.

2) 김재민,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석사학위 논문,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안보 역학관계의 유동성 및 불안정성 증대, 해양 권익 및 영유권을 둘러싼 대립 심화, 전략 무기 및 원거리 투사 전력 중심의 첨단 군사력 증강 지속 등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세계적 차원의 미·중 경쟁 및 견제 관계는 동아시아 차원의 강대국간 역학관계 변화와 해양 분쟁 격화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도 그대로 투영된다.³⁾

이제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잠재적 패권국가로서의 등장 가능성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절대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로지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대외적 수사 속에 감추어진 의도를 읽어야 한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 간의 틈바구니에 위치해있고,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한국의 주변 4대 강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 정치적 이해득실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이제는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 주변 4강 세력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첨예한 대립과 물밑 각축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역 방어를 위해 일본과의 역할분담을 도모하면서 한·미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반면, 중국은 개혁과 개방으로 성공적 추진으로 막강한 경제력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군비증강으로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패권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주변국들의 의심을 눈초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중국 위협론’이라는 용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중국의 해양력 신장과 해군력 증강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해양안보 변화는 우리의 정책적 대응과 해군으로 하여금 해양에서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지형적으로 반도 국가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해양국가와 다름없으며,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해상교통로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그 중요성은 굳이 언급하지

(2014.2), 2쪽.

3) 국가전략문제연구소, 「2016 동아시아 전략평가」, 국가전략문제연구소(2016). 1~2쪽.

않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군사적 측면의 핵심인 중국의 군사정책을 살펴보고, 군사정책 구현을 위한 군사전략의 변천과정과 현재 채택중인 군사전략을 평가·전망한 후, 군사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군 현대화 추진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이후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해군력의 증강이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후, 대응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적극적인 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일반적으로 중국의 부상은 급격한 중국의 경제성장을 떠올린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 강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미 동북아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군사력 현대화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해양 정책 변화와 해군력 증강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평가해보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에 있어 군 현대화는 하루아침에 부각된 문제가 아니라 군사정책과 군사전략의 변화에 발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정책을 이해해야만 군 현대화를 전망할 수 있고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가 군사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국제환경 특히 안보환경, 국내환경으로서 국가의 정치제도나 경제제도, 국력,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게 된다. 크게 국제환경과 국내환경을 바탕으로 국가이익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전략을 설정한다. 이후 국가안전보장체제를 통해 국가안전보장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정책과 군사정책, 외교정책을 포함하는 국방정책을 수립한다. 국방정책의 핵심인 군사정책은 크게 군사전략과 전력구조로 나누어지며 전력구조는 군 현대화를 통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분석하기 위해 비군사 분야를 제외한 정책, 군사정책을 우선 살펴보고, 군사정책의 양대 핵심요소인 군사전략과 군 현대화를 분석하여 중국군의 실체를 분석하였다.

이어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해군력의 증강이 미치는 영향을 동북아와 한반도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다자간 안보협력, 대중국 다각적 협력, 한·미 연합방위태세, 해양 정책 강화 및 해군력 증강이라는 4개의 주제로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중국의 국방백서와 중국군 관련 학술자료 및 연구자료, 기타 발표자료 및 인터넷 기사 등을 종합 정리하였다.

이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 1장은 중국의 군사정책과 해군력의 증강을 통한 중국의 군사적 부상 의지를 고찰하고 연구범위 및 목적을 설명하였다. 제 2장은 중국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변화,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의 현대화를 평가하고, 제 3장에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보고 제 4장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5장은 결론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제2장 중국의 해군력 현황

제1절 중국의 군사정책과 전략의 변화

중국의 군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중국의 국가전략과 국방정책이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전략과 국방정책을 살펴보고 중국의 현 군사전략의 방향을 알아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I. 중국의 국가전략

2012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회의(이하 ‘당회의’)에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신(新) 지도부는 ‘2개 백년 목표’, ‘중국의 꿈(中國夢)’을 중국의 새로운 국가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2013년 3월 시진핑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정운영의 핵심개념으로 ‘중국의 꿈’을 분명하게 내세웠다. 이 연설에서 시진핑은 ‘중국의 꿈’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중국 국방백서에서 “중국의 국가전략목표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를 건설하고, 신중국 건국 100주년에 부강·민주·문명·화합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의 꿈은 강국의 꿈(強國夢)이고, 군대에 있어서는 강군의 꿈(強軍夢)이다. 강군이 있어야 국가를 지킬 수 있고, 강국은 반드시 강군을 필요로 한다.”⁴⁾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최근 2017년 10월 개최된 제19차 당회의에서는 중국이 중화민족의 부흥,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 건설을 목적에 둔 새 시대에 들어섰다면, ‘시진핑 사상’(習近平思想)을 지도사상으로 한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공식화 했다. 에 근거해 안보, 국방 영역에서 몇 가지 ‘기본 방략’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50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세계 일류

4) 국방정보본부, 「2015 중국 국방백서:중국의 군사전략」, 국방정보본부(2015), 6쪽.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보, 국방 영역에서 ‘총체국가안전관’에 기초한 새로운 기본 방략(方略), 강군 건설과 중국 주도의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 구상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방 영역에서는 중국의 국가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세계일류 군대 건설을 목표로, 국방개혁, 작전역량 건설, 무기장비 발전, 작전능력 제고, 군사태세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시진핑 사상의 공식 명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사상’(習近平 新時代 中國特色 社會主義思想)이다. 이 명칭이 시사 하는 것처럼, 중국이 과거와는 다른 새 시대(新時代)에 진입했고, 이에 부응해 시진핑이 그동안 제시한 다양한 사상, 이론, 지침을 향후 현대화 강국건설을 위한 중국의 ‘지도사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이 직면한 새 시대는 중화민족의 부흥, 중진국 수준 사회의 전면적 실현(소강사회 전면 실현, ‘全面小康社會全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 건설을 목전에 둔 시대를 뜻한다. 그리고 새 시대는 국가와 사회 변화의 주요 동력이 되는 주요 사회 모순이 변화한 시대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새 시대의 주요 사회 모순을, ‘인민’의 물질문화에 대한 요구를 넘어선 ‘아름다운생활’ 요구의 지속적인 증대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불균형,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요구, 곧 민주·법치·공평·정의·안전·환경 등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진핑 사상은 크게 중국공산당(이하 ‘중공당’)의 총임무, 임무실현 단계, 임무실현 원칙, 임무실현 수단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우선 중공당은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총 임무로 규정하고, 21세기 중반까지 두 단계에 걸쳐 완수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강사회 전면 실현’을 전제로 2020~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2035~2050년 사이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실현함으로써, 중국이 제반영역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공당은 국가 건설과 발전, 각종 개혁추진 과정에서 ‘5위 일체의 총배치’(五位一體總布局)와 ‘4개 전면’(四個全面)의 전략적 배치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5위 일체의 총배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 영역을 유기적, 통합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4개 전면은 소강(중진국 수준의) 사회 전면 실현(全面建成小康社會), 개혁 전면 심화(全面深化改革), ‘의법치국’ 전면 추진(全面推進依法治國), 당(黨)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全面從嚴治黨)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발전, 국가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새 시대 강군 건설,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 등도 시진핑 사상에 포함된다.⁵⁾

II.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1. 시진핑 시대의 국방정책

중국의 국방정책은 국가가 제정한 일정 시기 내 국방사무의 기본 행동준칙으로서, 국가정책의 중요 구성 부분이다. 동시에 국방정책은 국가가 국방건설과 국방투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총정책을 가리킨다. 이러한 중국의 국방정책 목표와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국방백서이다.

2015년 5월 발표한 중국 국방백서에서 중국군은 ‘신형세(新形勢)’에 부합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해야 하며, ‘적극방어 군사전략 방침’을 이행하고 국방 및 군사력 현대화를 가속화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럼으로써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중국군이 ‘신형세’를 강조한 것은 “신 패권주의, 권력정치, 그리고 신 개입주의”가 등장하여 강대국들 간의 권력 재분배 및 권익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테러, 인종 및 종교분쟁, 영토분쟁 등 첨예한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힘으로써 분쟁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변 정세를 반영한 것이다.⁶⁾

또한, 제19차 당회의에서는 중공당은 시진핑 사상에 근거해 안보, 국방 영역에서 몇 가지 ‘기본 방략’(方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스템 안보’ 개념에

5) 이상국,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제1694호, 주간국방논단, 한국국방연구원(2017.11.), 1~2쪽.

6)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동아시아 전략평가」,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15), 97쪽.

기초하여 안보와 국방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9차 당대회 보고는 안보, 국방 영역에서 ‘총체국가안전관’(總體國家安全觀)의 견지를 요구하고 있다. 총체국가 안전관은 “인민 안보를 중지(宗旨)로, 정치 안보를 근본으로, 외부와 내부 안보, 국토 안보와 국민 안보, 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의 통합 관리, 자국 안보와 공동 안보의 통합 실현”을 뜻한다. 그리고 이 국가안보관에 기초해 국가안보(安全)제도체계 개선, 국가안보능력 건설,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둘째, 시진핑 사상의 국방 영역의 기본 방략에는 중국군의 임무, 강군 목표와 방법 등이 포함된다.

우선 시진핑 사상은 중국군을 ‘전면적인 소강사회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전략적 지렛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 실현 차원에서 중공당은 신시대 강군 목표, ‘중공당의 영도가 관철되고(聽黨指揮), 실전 수행과 전쟁 승리가 가능하며(能打勝仗), 품격이 우수한(作風優良) 군대 건설’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강군 건설의 동력으로는 정치建军(政治建军), 개혁강군(改革强军), 과학기술 흥군(科技兴军), 의법 치군(依法治军)의 견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강군 건설을 위해 실전(實戰), 혁신(創新) 추동, 시스템(體系) 구축, 집약·고효율, 민군(民军) 융합 5개 영역에서 ‘더욱 집중’(更加注重)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실전은 임전태세 강화와 작전능력 제고, 혁신 추동은 군사이론·군사기술·군사조직·군사관리 혁신을 뜻한다. 시스템 구축은 군 개혁 조치 간의 상호 연계성을 파악해, ‘리더십의 고위층 설계(頂層設計)와 각 개혁 층위 간의 연결’, ‘장기적 설계와 과도적인 설계’ 등을 정확히 처리해, 개혁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인 국제환경과 안정적인 국제질서 구축과 관련하여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평화 발전, 상호 호혜적 개방전략, 정확한 의리관(正確義利觀), 공동·종합·협력·지속가능한 新安보관의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완전한 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안보, 국방 영역의 방략에 포함되며, 완전한 통일은 대만과의 통일 실현을 염두엔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보와 국방 방략에 따라 중공당은 강군 건설의 목표와 실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공당은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우선 2020년 까지 기계화 및 정보화 건설에서 중대한 진전, 전략 능력의 큰 향상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중국군은 국가발전목표에 대응해 2035년까지 국방 및 군의 현대화를 근본적으로 실현하고,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서 기계화와 정보화 건설에서의 중대한 진전은 정보화 위주의 기계화와 정보화 융합 발전으로, 무기장비의 지능화, 정보화, 자동화 능력 제고를 통한 戰場 감지능력, 정밀타격능력, 합동작전능력의 실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략능력 제고는 이번 당대회 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화한 용어로, 전략역지, 강대국 간 군사경쟁, 전쟁(억지) 문제에서 로켓군 등의 능력 제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략능력 제고에 대한 이러한 공식적인 언급은 미군의 사드(THAAD)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인식(중국의 국가전략안보 손상, 역내 전략균형 파괴 초래)을 고려할 때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앞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군은 효과적인 전략태세 형성(유리한 전략 환경 형성), 위기관리, 전쟁 억지 및 전쟁 수행 능력 보유를 중국군의 기본 임무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작전 영역에서는 우선 5개 전구(동부, 남부, 북부, 서부, 중부 전구) 합동작전 지휘기구의 효율성 제고와 철저한 군사투쟁 준비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 군사투쟁 준비의 통합 추진, 신형 작전역량(해군, 로켓군, 사이버 및 항공우주 군사역량)과 지원 역량의 발전, 실전화 군사훈련 전개, 군사역량의 운용 강화, 군사 영역의 지능화 발전 가속화, ‘네트워크·정보 체계에 기초한 합동작전능력’과 전역작전능력(全域作戰能力) 제고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 중 전역작전능력은 부대가 주둔 지역 또는 소속 전구(해역, 근해 또는 원해)가 아닌 다른 지역이나 전구에서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한편 군사역량의 운용 강화는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해 주목된다.⁷⁾

7) 이상국,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제1694호, 주간국방논단, 한국국방연구원(2017.11.), 3~4쪽.

2. 중국의 군사전략

21세기 세계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G2시대 도래로 지구적 차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환경 등에 대해 2009년부터 미·중 간 ‘전략경제대화’를 기점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아·태 지역에서의 패권경쟁은 더욱 첨예화되고 협력과 경쟁관계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 국방성의 『2018년도 중국군 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8)』에서도 중국의 군사전략을 분석가능하다. 이는 미 국방성이 『2000년 미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따라 중국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변화, 군사과학기술 개발 현황, 군조직 개편, 작전개념 발전 및 우주 및 사이버 공격 등 중국군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미 의회에 보고하는 문건이다.

이 보고서는 요약문과 전년 대비 중국 국가전략 발전, 중국군(PLA) 발전현황, 군현대화 목표와 현황, 국방비 현황, 대만사태 대비 군사력 증강, 미·중 군사협력 현황 등 6개 장(章)과 중국군의 글로벌 영향력, 중국의 북한정책과 전략, 중국군 합동작전 능력, 전략폭격기 작전범위, 시진핑의 군사혁신전략 등 5개 특별주제(special topic),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 군사력 비교, 미·중 군사교류협력 현황, 약어집 등 3개 부록서(appendix)로 구성된 총 145쪽 분량이다.

이 보고서에는 주요 내용을 7가지로 요약하였다.

① 중국은 강대국을 지향하고 있다. 2002년 이래 중국은 매 10년 단위로 총체적이며 포괄적인 국력 증강 계획에 따라 중국꿈(中國夢)과 중화 민족부흥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주석 집권 이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② 중국군 영향력의 확장이다.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BRI) 전략에 따라 해당국가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를 앞세워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7월의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를 99년간 임대한 사례와 그리스 피라우스 항구와 호주 다윈 항구에 대한 투자전략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그 영향력 범위를 국제평화유지, 해상교통로(SLOC) 보호, 인도주의 지원작전/재난구조 작전(HA/DR)을 핑계로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지난해 8월 1일에 아프리카 지부티에 중

국의 해군기지를 구축한 것이다.

③ 중국군의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압박이다. 이는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각종 군사적 및 경제적 제재와 남중국해(SCS), 동중국해(ECS)에 대한 해양영유권 주장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 70일간 진행된 중국-인도-부탄 국경지대에서 인도와의 군사대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중국군은 지난 3년간 장거리 공중타격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로켓사령부는 미국 우주군 창설에 맞서 우주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전략지원사령부는 각종 사이버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군은 미국과의 군사과학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민간산업체로부터의 첨단기술 획득을 확대하고 있어 미국 뿐만 아닌,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다.

④ 대대적 구조개선이다. ‘싸워서 이기는 군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군을 합동군(joint force) 구조로 개선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통제권 강화, 정보공간 지배, 장거리 타격능력 향상, 우주 및 사이버 공간 장악 등의 공세적 전투태세를 미국과 주변국에 시현하고 있다.

⑤ 중국군의 대만에 대한 위협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대만에 대한 군사적 또는 외교적 압박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인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가 거부되고 있다. 또한 『2017년 대만 국방백서』는 2017년 한해 동안 중국군의 대만해협 군사적 활동이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⑥ 중국군의 대(對)북한 동향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부전구(北部戰區)사령부(NTC) 동향을 포함시켜 유사시 북부전구사령부가 한반도 사태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주요 임무는 난민유입 저지, 북·중 국경통제 그리고 대(對)북한 군사개입으로 보았다. 특히 북부전구사령부 예하 3개 집단군(78·79·80軍) 약 17만 명이 동원될 것으로 보았으며, 최근엔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대비태세 훈련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⑦ 중·미 간 제한된 군사교류협력이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면서 미국과의 교류협력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한해 동안의 중·미 간 교류협력은 2000년 미 국방수권법이 제한한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협력분야는 상호이익 증진과 우발적 상황 관리 차원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국방성은 중국군이 군사전략 개념, 군사력 증강 목적, 군사력 현대화에 대한 투명성 보장 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관찰할 것이라고 하였다.⁸⁾

중국의 군사전략은 인민전쟁전략으로부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어전략을 거쳐 공세적 적극방어전략 개념으로 변환되어 왔다. 중국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의 변화는 국제적으로 강대국의 ‘세력균형’과 ‘세력전이’의 결과이며, 중국 국력의 신장과 경제력 향상에 따른 군사현대화 정책의 산물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속에서 전략적 협력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들의 군사력은 국내 경제력보다 빠르게 증강하고 발전해 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G2 체제에서 중국의 군사전략은 신시대 군사전략 방침에 따라 외부위협에 ‘반접근 차단 및 지역거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⁹⁾ 또한, 중국의 군사전략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거 중국의 군사전략의 변천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오쩌둥의 ‘인민전쟁 전략’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군사전략 변천과정을 개관하고, 현재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반접근/반거부(A2/AD)’의 개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1> 중국 군사전략의 변천

군사전략	시 기	지도자	국제질서
인민전쟁전략	1949~1976	마오쩌둥	냉전체제
유한국부전략	1978~1992	덩샤오핑	데탕트~탈냉전
첨단무기 제한전쟁전략	1993~2012	장쩌민~후진타오	탈냉전체제~G2
반접근/거부전략	2013~현재	시진핑	G2~미중 전략 경제대화

8) 한국군사문제연구원, 「KIMA Newsletter 제344호(2018)」, 1쪽.

9) 김주석, 「G2체제에서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양상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25호, 조선대학교 (2017). 129쪽.

Ⅲ.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시진핑 시대, 2013 ~ 현재)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와 국력신장으로 미국과 G2시대의 패권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은 2013년 4월 미국을 겨냥한 ‘중국무장역량 다양화운동’ 방침을 공표하면서 중국의 군사전략의 핵심인 반접근/지역거부 전략(A2/AD; Anti-Access/Area-Denial)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A2/AD 전략은 1980년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인 류화칭(劉華清)제독이 만들었던 것으로 그가 주장한 적극방위전략 도련전략이 바로 오늘날 중국이 동아시아권에서의 중국의 패권 확장을 위한 목적과 영향력 유지 등 미국의 해양세력의 접근을 거부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전략으로 성장하였다.

류화칭의 주장은 도련선(島鍊線)이라는 도서를 기반으로 하여금 한 방위라인을 설정하여 다른 해양세력의 접근을 차단 및 거부한다는 것으로 그가 지정한 도련선은 총 3개의 라인으로 되어있다. 제 1도련선은 쿠릴열도에서 시작해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말라카해협에 이르는 중국쪽 근해 바다와 중국 주변 국가들에 완충지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 2도련선은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를 연하는 서태평양연안 지대에 대한 장악을 목적으로 한다. 제 3도련선은 알류산열도, 하와이, 뉴질랜드 일대를 연하는 선으로 서태평양 전역에 대한 장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근미래까지는 미해군의 전력에 질적·양적으로 부족하기에 중국 해군으로서의 해군력 증강과 비대칭전력의 투자를 통한 A2/AD 전략을 구사하여 도련선의 유지와 해양거부를 하는 것이다.

A2/AD 군사전략 추진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그 가운데 “1991년의 걸프전과 1999년 코소보 사태에서 사용된 미국의 첨단무기에 대한 반접근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군사전략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중국의 A2/AD 군사전략은 그동안 중국이 주장해 온 남중국해 분쟁지역에 대한 중국의 국가이익 보호와 미국의 중국 인근해역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1> 중국의 단계별 해양방위 경계선 확장 전략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회귀 전략과 개입확장에 따라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A2/AD)’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제2열도선 통제능력을 확보하고 탄도미사일 (ASBM)과 DF-21D를 작전배치 단계에 들어감으로써 G2체제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공세적 전략을 강구할 것으로 분석된다.¹⁰⁾

제2절 중국의 해양전략과 정책의 변화

I. 중국의 해양전략

중국이 해양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편전쟁 때였다. 중국이 해군력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 서양과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¹¹⁾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 김주석, 「G2체제에서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양상 분석」, 143쪽.

11) 김경민, 「중국의 해양전략」, 통권 88호, 중소기업(2001), 97쪽.

이후 냉전시기까지 중국은 대륙지향적인 국가전략을 고수하며 해양진출에 소극적이었다. 특히 모택동 시기에는 해양의 중요성을 등한시 하였다. 하지만 등소평 시기가 도래하면서 해양에 대한 인식이 전향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 배경에는 1970년대 구소련 해군의 팽창과 관련이 있으며, 1974년 베트남 간에 서사군도를 둘러싼 충돌과 1079년 중국과 구소련 사이에 대규모 국경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남·동 중국해에서 소련 해군에게 견제를 당했던 중국으로서는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교통로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¹²⁾ 한편, 중국은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외 해상수송로의 개념이 없었고, 국내의 방대한 자원에 기반을 둔 ‘에너지 자급자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 경제성장 등으로 석유를 수입하게 된 이후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무역중대, 대륙붕 해저자원, 에너지 확보 등으로 인해 해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양인식 변화에 따라 마한이 주장한 해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의 해양정책과 전략 역시 해양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중국 지도부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해양 전략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21세기 환경과 중국의 경제·군사력 성장에 부흥하도록 공세적인 해양 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더 이상 연안방어 해군의 아닌 오히려 마한적 사고에 입각한 해양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해양 전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안방어전략, 근해방어전략, 그리고 적극적 근해방어 및 원해 호위전략으로 발전되어 왔다.¹³⁾

첫째, 연안방어전략은 2차 대전 후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전략으로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할 당시에는 지상군 전략이 해양전략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이는 국민당과의 내전 및 일본과의 전장이 주로 육상에서 전개되어 중국 군부는 육지로부터의 침략을 자국 안보에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인민전쟁 개념을 방위개념으로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해양전략은 부재하였고, 단지 지상군의 보조수단에 불과한 전술적 수준의 방책만 제공

12) 김종두, 「중국 해양전략론」, 문명사(2002), 88~94쪽 인용.

13) 김정현, 「한국 해군이 지향해야 할 해양전략」, 16호, 전투발전연구지, 해군본부(2009.), 21쪽.

하였다. 1949년 4월 공식 창군된 중국 해군은 소형선박 위주로 구성된 지상군을 보조하는 수준의 연안방어 중심군이었다. 즉, 건국 초기 이후 1970년대 초까지 중국은 “연안방어전략”을 채택했다고 할 수 있다. 연안방어전략의 개념은 소형 유도탄정 및 어뢰정 등을 이용한 게릴라식 해상전투에 의해 적이 전투함을 연안에서 방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안방어전략 개념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해군의 임무를 대만의 해상공격에 대비하여 연안방어에 집중하고, 국민당 정부와 분쟁하고 있는 해역에서의 상선 및 어선 보호, 연안 탐사 및 항해를 지원하며,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의 해안 침투를 저지하는 등 연안방어에 한정하였다.¹⁴⁾

둘째, 근해방어전략은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후반에 이르는 전략으로 1970년 중반 이후 중국 해양전략가들은 중국의 경제이익을 수호하고 국외에서 오는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중국이 연안을 넘어 해양력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군 해군사령관이었던 류화칭 제독은 중국해군의 발전방향으로 ‘근해 방어(Offshore Defense)’로 나갈 것을 주장했다.¹⁵⁾ 근해방어전략의 개념은 중·대형함으로 근해에서 적의 위협이 국부의 중심인 연안 경제특수에 도달하기 전 분쇄한다는 것이다. 등소평이 집권하던 시기(1977~1989)에는 ‘선경제 후 국방정책’하에 국가전략군으로 해군력 위주의 전력을 건설하였다. 중국이 주장하는 ‘근해’의 개념은 특별히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근해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해양지역을 의미한다. 중국은 근해를 북쪽의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일본과 필리핀을 거쳐서 말라카 해협까지라고 주장한다. 근해의 가장 원거리는 중국 본토로부터 약 1,000해리나 떨어져 있다. 이러한 중국의 ‘근해’라는 개념의 확장은 군사적으로 작전을 위한 공간을 확대시키고 중국의 해양전략 사고를 도약하게 했으며 적들이 중국의 주권영토에 진입하기 전에 차단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중국 해군은 류화칭 제독의 주도하에 등소평의 전략개념을 수용하여 근해방어 전략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류화칭은 해군사령관으로 취임한 1982

14) 김덕기, 「21세기 중국해군」, 해양전략연구소(2000.), 57~60쪽.

15) 안덕열, 「중국의 공세적 해양전략 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논문, 합동군사대학(2016.), 23쪽.

년 5월 해양전략에 관한 회의에서 이른바 근해방어전략(Off-Shore defensive strategy)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내용은 “해양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외부침략만 대응하는 것이 해군의 임무가 아니다. 해양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경쟁은 지역전쟁이나 주변전쟁을 유발할 수 있지만, 해군분석가들의 중국의 국익을 위해 모든 해양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해군력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해군은 중국연안 밖에서 원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화칭은 아래와 같이 중국연안을 벗어나 독자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근해작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2> 중국의 3단계 발전전략

구분	시기	목표	전력 건설
1단계	1980년대 ~ 2000년	제 1도련 내 해양통제	무기체계·플랫폼의 현대화
2단계	2000년 ~ 2020년	제 2도련 내 해양통제	항모전단
3단계	2020년 ~ 2050년	전략적 거부·억제·통제	원양함대



셋째, 적극적 근해 방어 및 원해 호위전략은 1990년대 초반에서 현재에 적용되는 전략이다. 그 개념은 ‘위협이 본토에 도달 전 근해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

여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중국 해군은 원해의 섬들, 즉 대만과 서사군도 및 남사군도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평시 원해상 자원탐사를 포함한 중국의 해양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중국의 근해방어는 연안에서의 중심방어 및 전방배치를 통해서 확대된다. 적의 공격을 지연 또는 차단하기 위해 내부 및 외부에서 합동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중국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대규모 기동전을 수행한다. 적의 해상봉쇄를 효과적으로 차단 또는 격파할 수 있어야 하며, 적의 해상교통로를 쉽게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연안 및 원해 해양교통로를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주요 해역에 대한 원해 항해를 보장하고, 중심 깊은 다양한 방향에서 해양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양우세권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16)

<표-3> 중국국방백서에 나타난 해양안보에 대한 인식

국방백서	내용
2000년	남중국해지역에서의 중국권익을 잠식시키려는 돌발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타 지역 국가들도 남중국해 문제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2002년	남중국해 지역정세는 기본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관련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당사자간 행동선언”을 채택했다
2004년, 2006년	미언급
2008년	영토와 해양이권(海洋利權)의 분쟁은 여전히 심각하다.
2010년	국가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海洋權益)을 수호하는데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2012년	일부 인접국가들은 현재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관련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를 확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어도 문제에 있어서 분쟁을 조성하고 있다.
2014년	중국의 영토주권 및 해양권익 관련 일부 연안국가들은 도발적 행위를 하고 중국의 섬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참견하기 바쁘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항공 및 해양 감시와 정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중국 주변에서의 안보 및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16) 정진근, 「중국의 해양전략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2011.), 44쪽.

중국 지도부는 1991년 걸프전을 계기로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로 무장한 해군력의 보유가 시급하여 특히 첨단기술 시대의 미래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전략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¹⁷⁾ 이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는 몇 년 간의 연구 끝에 1993년 새로운 독트린으로 ‘고기술 조건적 기술전쟁’을 채택하였고 이러한 군사독트린의 조정은 해군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중국의 상관관계를 의미 심장하게 변경시켰으며, 과거와 비교해 중국 해군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강화시켰다. 첫째, 갈수록 중요해지는 중국의 해양 및 대외 경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해군의 역할과 임무를 확대하고, 둘째, 중국 해군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를 상향하며, 셋째, 연안 방어에서 대양(원해) 방어로 전력을 변화하고, 넷째, 중국군의 핵심임무인 전투임무에 부가하여 대테러, 평화유지 활동과 인도주의적 지원 작전이 포함된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을 강조하였다. 이 독트린을 구현하기 위해 중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군사력 증강에 사용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국방비로 1,600억 달러를 사용하였다.¹⁸⁾ 여기에 가장 큰 수혜자는 해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실제로 육군의 비율을 70%에서 50% 수준으로 줄이고, 해군의 공군의 비율을 25%로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태 지역에서 미국 해군의 작전을 차단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2/AD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반접근(A2)은 미군이 서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전진기지에서부터 대(對) 중국 작전 수행을 차단하는 전략개념이다. 반면 지역거부(AD)는 미국 해상전력이 중국의 핵심이익 해역인 동·남중국해와 서해에서 자유로운 군사행동을 차단하는 것이다.

미군 해군정보당국은 ‘중국 해군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해군이 근해와 원해에서 동시 작전 수행이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림 1>에 서처럼 제1-2도련선 방어 개념을 보다 구체화한 해양방어권(Matime Defense Layer) 개념으로 작전수행 개념을 변경했다고 분석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1방어권은 연안으로부터 540~1,000해리 떨어진 해역이다. 이 방어권은 말레

17) 김덕기, 「21세기 중국 해군」, 해양전략연구소(2000.), 107쪽.

18) 반길주, 「국제 현실정치의 바다 전략」, 해양전략연구소(2012), 348쪽.

이시아와 필리핀, 일본이 포함되는 해역이며 대함탄도탄미사일(DF-21)과 핵잠수함이 주된 방어 수단이다. 제2방어권은 연안으로부터 270~540해리 떨어진 해역이다. 이 방어권은 베트남과 일본의 오키나와를 잇는 해역이며 잠수함, 수상함, 항공전력이 주요 수단이다. 제3방어권은 연안으로부터 270해리 떨어진 해역이다. 이 방어권은 한국의 입장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과 대만을 잇는 해역이다. 이 해역에서는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 해안방어 순항미사일(CDCMs : Croatal Defense Cruise Missiles) 등이 효율적인 방어 수단이다. 따라서 미국 해군은 동중국해나 타이완 근해에서 위기 시 항모전투단을 전개시키기 위해 중국 해군의 잠수함, 항공기와 수상함에 탑재된 대(對) 수상함 미사일이나 CDCM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2> 중국 해군의 해양방어권 개념도



중국 해군의 해양방어권 개념은 미국 해군의 다층방어 개념과 유사하나 현 중국 해군의 능력을 고려하면 모든 방어권 내에서 동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해군력 현대화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가 되면 미국 해군정보국에서 제시한 제1-3해양방어권을 동시에 방어한다는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다. 최근 중국 해군이 <그림 1>의 제1-2해양방어권에 전력을 투사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남중국해의 해양분쟁 당사국과 인접 국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한국의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에 항의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은 한반도가 제3해양방어권의 최종 방어권이며,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아시아 재(再)균형 전략’ 및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해군은 서태평양에서 미국 해군의 자유로운 해양활동을 차단하고 해상교통로(SLOC)를 장악하기 위해 항모전투단, 해군의 비대칭전력인 대(對)위성(ASAT: Anti-Satellite) 무기체계, 전략핵잠수함(SSBN), 공격핵잠수함(SSN), 제2포병에서 운용하고 있는 DF-21 ASCM 등을 강화하고 있다.¹⁹⁾

오늘날 중국의 해양전략도 새로운 독트린에 맞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적극적 근해방어전략에 탄력을 받은 중국은 해군력 진화와 해양을 이용한 이익의 극대화를 적극 추진했다. 경제성장이 바다를 통한 무역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첨단무기에 투자할 국력의 성장이라는 변화에 따라 그동안 미국이 지배하였던 해양을 되찾아올 전략의 수립을 모색하였다. 이는 군사전략에서 바다라는 영역의 활용을 극대화시켜 해군의 국가이익과 안보에 전술적 방책수준에 그치지 않고 해양전략을 수립하여 진화시킴으로써 중국을 해양국가로 변모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수차례 언급된 ‘국방백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3년 국방백서에서는 ‘해양강국’을 국가 해양전략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시진핑은 위대한 중국, 강항 중화인민해방군과 함께 “해양강국 그리고 강항 해군” 건설 슬로건을 제시하여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공산당 이념 및 국가정책을 시현하고 있으며, 2015년 국방백서에서는 군 병종에 따른 군사역량 건설 방향으로서 “해군은 근해방어, 원해호위의 전략요구에 따라 점차 근해방어형에서 근해방어와 원해방어형의 결합방향으로서의 전환을

19) 김덕기, 「동북아 해군력 군비경쟁」, 통권 43호(Vol.21, Summer), STRATEGY 21(2018), 139~141쪽.

실현하여....(중략).... 전략억제와 반격, 해상 기동작전, 해상연합 작전, 종합방어 작전과 종합보장능력을 제고한다”고 밝힘으로써 최초로 ‘근해방어와 원해방어의 결합’을 명문화하고 있어 중국 해양전략 및 작전범위의 확대와 적극방어의 공세적 경향을 한층 더 강하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II. 중국 해군의 부상

중국의 해군력 증강 배경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제18차 당 대회 개막식(2012년 11월)에서 남긴 “해양자원 개발을 위해 우리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략)... 중국의 해양 권리(Maritime Rights)와 이익을 보존하고, 중국을 해양국가(Maritime Power)로 키워야 한다.”는 연설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 시 처음 언급한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즉 중국이 주변국을 아우르는 21세기 육상실크로드(一帶)와 해상실크로드(一路)를 통해 거대한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선언하고 있는 강대국화 전략의 핵심 요건은 중국이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 변모하는 것이며 이것은 해군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은 2015년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해상군사투쟁’과 ‘해상군사투쟁준비’를 강조하고, 중국군의 작전방향을 해상방면으로 명시하는 한편 주요위협을 대만독립 세력과 남·동중국해 권익을 침범하는 외부세력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²¹⁾. 이에 해군(PLAN)은 군의 현대화, 특히 해군의 현대화를 다방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2017년 4월 자국산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에 대한 진수식을 가지고 향후 4척의 항모를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30대의 무장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 강습상륙함 건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²²⁾ 중국 해군력의 발전은 지역 군사강국을 표방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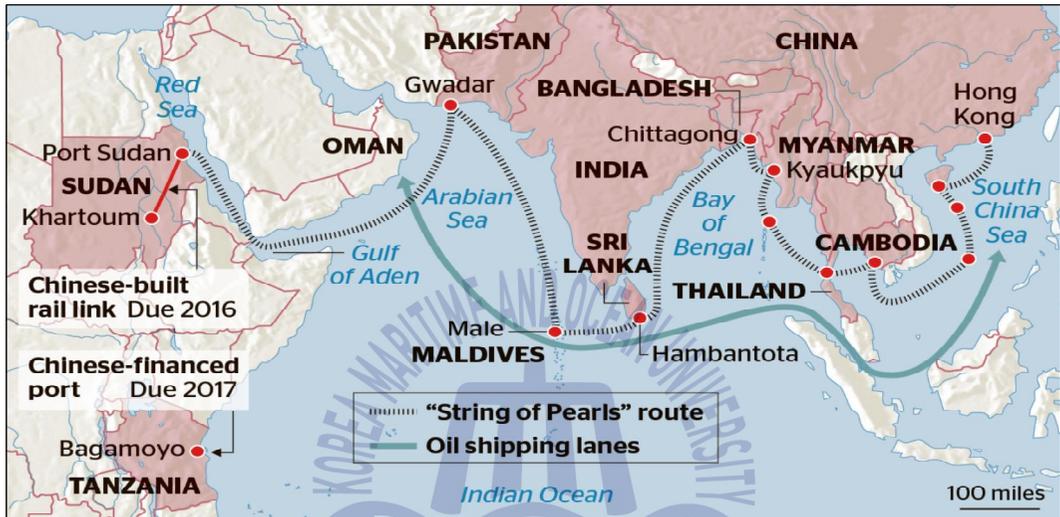
20) 안덕열, 「중국의 공세적 해양전략 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논문, 합동군사대학(2016), 27~31쪽 재인용.

21) 이상국,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군몽(強軍夢) 구상과 군사안보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 31권 제3호 (2015). 19쪽.

22) 세계일보, “중국, 해군굴기 박차, 초대형 강습상륙함 건조 착수(2017년 3월 31일)”.

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기가 중·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가속화 될 예정인 바, 동북아 지역 안보에서 이러한 중국해군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

<그림-3> 중국의 해상실크로드와 ‘진주목걸이’ 전략



미국 해군정보국은 중국 해군의 지난 15년간 야심찬 해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기술적으로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 해군은 미국이 제1·2도련 중간해역에서 우세한 전력을 현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해역에서 시·공간적 제한사항을 갖고 있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핵 잠수함, 대함탄도미사일 등과 같은 비대칭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해군의 군함 현대화는 1950~60년 소련으로부터 모방 및 조립 단계를 시작으로 현재는 ‘적극적 근해방어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 구축함과 신형 잠수함을 연구·건조하는 5단계가 진행 중이며, 작전능력은 류화칭 제독이 발전시킨 3단계 전략건설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중국 해군의 능력은 3단계가 실현되는 2050년경에는 현 미국 해군 능력과 유사한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²³⁾ 중국 해군의 발전과 현대화에

23) 김덕기, 「미국 해군정보국 보고서를 통해서 본 중국 해군:개괄적 함의」, 제1590호(15-43), 한국국방연구원(2015.10.), 3~4쪽.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절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된다.

제3절 중국 해군의 현대화

I. 중국군의 변화와 현대화

중국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小康)²⁴⁾사회를 이룩하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강대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공산당(이하 중공당)은 2017년 제19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반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새롭게 제시하였다(추가 보강중). 2015년 중국의 국방백서인 『중국의 군사전략』에서 ‘중국의 꿈(中國夢)은 강국의 꿈이며 군대의 꿈은 강군의 꿈(強軍夢)’이라고 규정하고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의 손으로’라는 新 안보관을 제창하여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2015년의 국방백서를 보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큰 변화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정보화 조건 하 국지전 승리’를 기치로 군사전략을 혁신하고 군 구조를 최적화 하고 있다. 2015년 9월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인민해방군 30만 감축 선언 이후 중국군은 편제를 조정하였으며, 기강 확립을 위한 반부패 개혁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2015년 육군사령부를 신설하고 정밀작전과 입체작전, 전역(全域)작전과 다기능작전, 지속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해군은 근해 방어와 원양 호위형이 결합된 해상작전 형태로 전환시키며, 전략적 억제와 반격, 해상 기동작전, 해상 합동작전, 종합 방어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거리 8천km 이상의 쥐랑(JL)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4척과 수상·수중함 870여 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J-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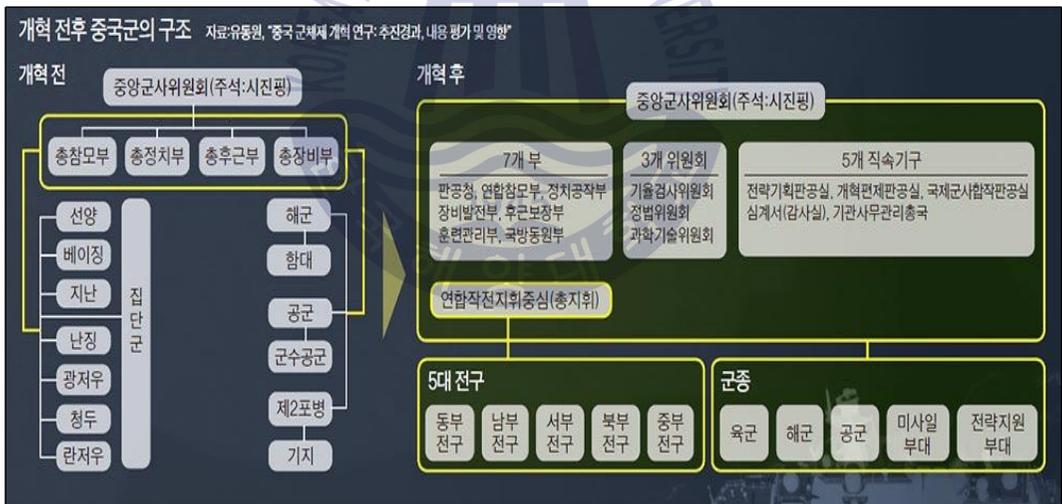
24) 소강(小康)은 중국사회의 발전단계에서 ‘따뜻하고 배부르다’는 뜻의 ‘온포(溫飽)’의 다음 단계를 말함. ‘온포’가 기초적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소강’은 문화적 여유까지 가미한 중산층 생활을 의미함.

함재기 20여대를 탑재할 수 있는 라오닝 항공모함을 전력화하고 국산 항공모함을 자체 건조중에 있다.

공군은 공격과 방어, 항공과 우주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항공우주방어 전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조기경보, 공중 타격, 공중 및 미사일 방어, 공수 작전, 전략 수송, 종합지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3천여대의 군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Y-20 전략 수송기를 작전 배치하고 스텔스 전투기인 J-20 시제기 시험비행 및 전력화에 이어 J-31 실물을 공개한 바 있다.

제2포병(전략미사일부대)을 개명한 로켓군은 사거리 8천km에 달하는 DF-31A와 사거리 15,000km에 달하는 DF-51B 등 500여기에 이르는 전략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DF-41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

<그림-4> 중국군 구조 개편



이상에서 중국의 군 현대화는 첨단기술조건, 나아가 정보화 조건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군의 현 기술 수준이 강대국에 못 미치기에 중국은 ‘중국 특색의 군사혁신’, 즉 서구의 정보화에 편승하고 따라잡기 위한 ‘도약식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5) 국방부, 「2016 국방백서」, 국방부(2016.), 16~17쪽.

서구의 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라잡고 경쟁하려 하기 보다는 적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중국은 네트워크 분야에서 먼저 정보화를 달성하여 적의 네트워크체계를 파괴함으로써 우세한 적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군 현대화의 방향은 기계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추구하되, 일부분야에서는 적의 급소를 겨냥한 비대칭 전력을 적극 구비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5> 중국군 배치현황



II. 해군의 현대화 및 전력강화

21세기 이후 중국해군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국 해군은 1970년대 말까지 ‘연안방어’ 전략에서 21세기 초까지 ‘근해방어’ 전략으로, 2004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해방어, 원해호위’ 전략을 고수하면서 해군전력을 현대화 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이 지켜야 할 핵심 국가이익이 해양으로 확장된 것에 있으며,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원활한 수출입을 위해서 해상교통로의 확보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해양에서 국가이익이 포괄하는 범위가 이미 ‘근해’를 넘어섰고, 근해밖의 해역에서 중국

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군사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해군력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전략학(2013)에서는 이 전력과 관련하여 중국 해군에 8가지 주요 임무를 강조한다. ① 대규모 전략작전 수행, ② 해상군사침입 억제 및 저지, ③ 도서 주권과 해양권의 수호, ④ 해양교통운송 안전보장, ⑤ 해외에서의 국가이익과 자국민의 권익수호, ⑥ 핵억제와 핵반격, ⑦ 내륙지상작전 지원, ⑧ 국제해양안보 수호이다. 이 밖에 2015년 발표된 중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근해방위와 원해호위형의 결합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원해호위전략은 작전운동개념과 전력건설 측면에서 방어개념이 수동적에서 적극적 방어로, 전력건설 측면에서 수평선 너머의 거리에 위치한 미해군의 수상 및 잠수함 전력에 대해 원거리에서부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력건설에 영향을 주었다. 그 내용은 ① 원거리에서 수상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데 사용되는 장거리 탐지체계, ② 정밀 대함 순항미사일(ASCM), ③ 장거리 타격과 향상된 성능의 무장을 탑재한 수상함, ④ 어뢰와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더욱 조용하고 거대한 신형 잠수함 등 4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4> 중국 해군의 3단계 발전계획²⁶⁾

기 간	발전개념	세부내용/주요 전력
제1단계 (1985-2000)	근해함대를 바탕으로 제1도련선 내 해역에 대한 근해 적극방어 능력구비	해군력 현대화를 통해 작전반경을 확대하여 남사군도와 같은 주권분쟁 해역에 대비, 근해의 해상교통로 확보능력 구비 * 주요전력 : Luda급 구축함, Kilo급 잠수함
제2단계 (2001-2020)	원해함대를 바탕으로 제2도련선 내 해역에 대한 중거리 전진방어	경(經) 항모 등을 확보하여 항모전단을 창설·운영, 해군작전범위와 임무를 필리핀 해와 인도네시아 해역까지 확대 * 주요전력 : Jin급 SSBN, Shang급 SSN, Kilo·Song급 SS, Liaoning 항모, Luh·Luyang급 구축함 등
제3단계 (2021-2050)	제2도련선 밖의 해역에 대한 장거리 전진방어 능력 확보	입체적 작전능력 구비로 원거리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미국에 대응하는 해양국가로 성장 * 주요전력 : Jin급 SSBN, Shang급 SSN, Yuan급 SS, Shandong함 등 자체건조 항모, Luyang-III급 구축함, Type-055 순양함 등

26) 김덕기, 「동북아 해군력 군비경쟁」, 통권 43호(Vol.21, Summer), STRATEGY 21(2018), 138쪽.

중국 해군은 1990년 초 뤼다(Luda)급 구축함 자체 건조를 시작으로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Sovremenny)-II 미사일 탑재 구축함 도입을 마지막으로 축적된 건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축함을 자체 건조중이다. 최근 건조된 루양(Luyang)-I/II(Type 052B/C) 구축함은 중국 해군함정 중 가장 현대화된 수상함이다. 특히 중국 해군이 2010년 이후 자체 개발한 수직발사대(VLS:Vertical Launch System)와 다기능 능동위상배열 레이더(Multi-functional Active Phased Array Radar)를 장착한 Luyang-II 구축함은 향후 중국해군의 주력이 될 것이다. Luyang-II급 구축함에는 사거리 약 90km인 HHQ-9 함대공 미사일과 사거리 240km인 YJ-62 함대함 순항미사일이 장착되어있으며, 최근 취역한 중국형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신형 Luyang-III 구축함은 사거리 130km인 HHQ-9ER 함대공 미사일과 이지스함 킬러로 불리는 220km의 YJ-18 함대함 순항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이 구축함을 3척 보유 중이며, 2018년까지 12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림-6> 중국 해군의 주력 전투함



최근 중국은 미국 해군의 DDG-1000 (Zumwalt)급과 유사한 Type 055 구축함을 건조중이며, 2020~2030년 사이에는 중국 해군의 주력 함정이 될 것이다.²⁷⁾ 중국의 최신 기술을 집약한 동북아 최대거함 055급은 중국 해군이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남중국해나 인도양 방면에서 장기작전이 가능하고 방공작전에

큰 비중을 둔 Type 052D 대비 더욱 큰 배수량을 바탕으로 방공, 타격작전 등 다양한 작전수행과 장기 작전 및 항속거리를 보유한 함정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Type 055급은 동북아시아 최대 크기의 수상전투함으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함급, 일본의 아타고급 구축함을 넘어서는 전장 183m, 만재배수량 12,000톤급에 달하는 거함이다. 또한 중국 해군 최초로 통합마스트 적용하였고, 중국은 055급을 시작으로 장차 건조될 주력 수상함에 모두 적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Type 055급은 4척이 진수된 상태이며 항공모함 전단과 함께 운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한층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²⁸⁾

<그림-7> 중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 구축함(Type 055급)



수상전투함보다 더욱 이목을 끄는 대목은 중국 해군의 야심찬 항공모함 건조 계획이다. 중국 해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구소련의 항공모함 바리야그(Varyag)를 개장한 라오닝(Liaonin)을 2012년 9월 취역시켰다. 2017년 4월에는 첫 중국산 항공모함인 Type 001A 산둥(Shandong)함이 진수했고, 2020년 취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닝과 산둥함 모두 스키점프대를 갖추어 함재기 운용에 제한점이 있으나, 두 번째 중국산 항공모함이 될 Type 002함은 사출기(Catapult)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7) 권정욱, 「중국해군(PLAN)의 현대화 추세와 동아시아 지역의 미·중 해군력 균형 전망」, STRATEGY 21 Vol.21, No. 1, Summer(2018), 10~12쪽.

28) 인터넷 포탈 다음, 검색일자 2018.9.18. 밀리터리 이야기 중 일부내용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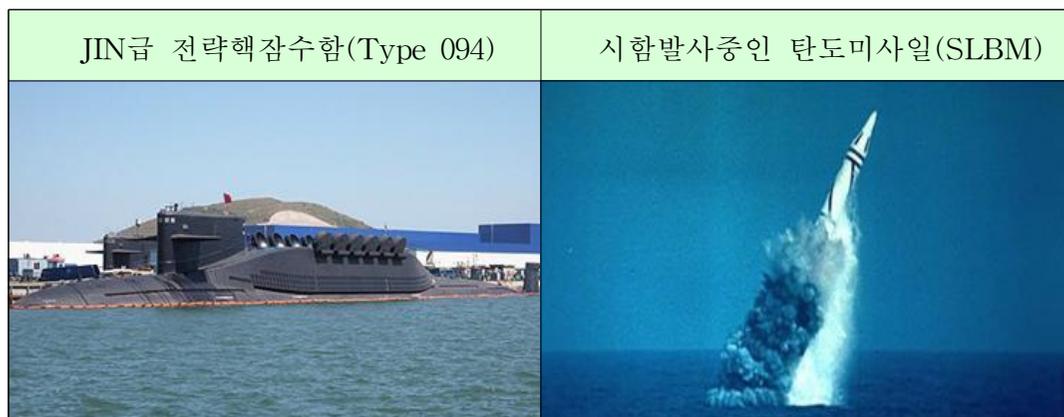
<그림-8>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잠수함 능력에서 중국 해군은 잠수함 전력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0~2005년에 건조된 밉(Ming)급, 송(Song)급, 위엔(Yuan)급-I 재래식 잠수함은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러시아로부터 8척의 Kilo급 재래식 잠수함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Yuan급은 공기불요추진체계(AIP: Air-Independent Propulsion)를 보유한 가장 최신화된 재래식 잠수함으로 12척이 있으며, 8척이 더 건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재래식 잠수함은 대함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예인 소나가 없어 자국의 주요 해상교통로를 위협하는 적국의 수상함을 탐지 및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 반면 신형 공격핵잠수함은 중국 본토로부터 떨어진 해역에서 정보 획득, 탐색 및 정찰과 對수상함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중국 잠수함은 미국 잠수함처럼 대(對)잠수함전과 지상전략목표 타격 등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JL-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이 장착된 진(Jin)급 전략핵잠수함은 해상억지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중국의 잠수함은 소음 등 장기간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지속 투자하면서 잠수함 건조 관련 기술을 향상시킨다면 향후 잠수함 정속도 등 많은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²⁹⁾

29) 김덕기, 「미국 해군정보국 보고서를 통해 본 중국:개괄적 함의」, 주간국방논단(KIDA, 2015년), 4~5쪽.

<그림-9> 중국 전략핵잠수함 및 탄도미사일



중국해군은 상륙함 능력에서도 함정의 현대화와 성능시험, 초수평선(Over The Horizon)작전이 가능한 상륙강습원정군 편성을 통한 합동연습으로 능력을 향상해 오고 있고, 이는 현재 인도주의와 해적퇴치작전에 상륙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중국은 4대의 Yuyi급 중형 공기부양선(LCMA), 4대 이상의 헬기, 50 대 이상의 장갑차를 탑재한 채 장거리 전개가 가능한 2만톤급 Yuzhao급(Type071) 대형상륙함 3대를 건조하였고, 곧 4번째 상륙함이 전력화될 예정이다. 후속 상륙강습함(Type081)은 헬기용 비행갑판이 완전 통합된 형태로 더욱 대형화될 전망이며, 남중국해에서 군수지원이 가능한 상륙함인 Yuting-II급 2대가 건조 중임에 따라 원 해작전에 있어 더욱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한 2대의 Pomornik급 다목적 공기부양정을 2대 더 건조 중에 있으며, 민군통합정책에 의거 2015년부터는 민간여객선과 로로선(RO/RO Vessel)을 항구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작전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³⁰⁾

제4절 평가 및 전망

중국을 지난 2000년 이후 공식 국방 예산을 두 자리 숫자로 계속 증액시키고

30) 권정욱, 「중국해군(PLAN)의 현대화 추세와 동아시아 지역의 미·중 해군력 균형 전망」, 13쪽.

있다. 그런데 일부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국방예산보다 실제로는 훨씬 많다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계산하면 중국의 군사비도 미국과 비슷한 GNP의 3.5%에 이르며 실제 구매력으로 계산하면 중국의 국방비는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물론 이런 외부 군사전문가들의 계산법에 대해 중국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공식입장은 2011년 기준으로 국방이 비중이 2.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국방예산의 증액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항하고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충 하여는 것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군비증강에 대한 최소한의 자위역량과 방어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며, 유사시 대면 해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전제하고, 중국의 군사비 증강이 방어적, 수동적 대응임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앞으로 경제성장이 순조롭게 상향 지속될 경우, GDP 대비 6%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한다면, 군사대국화는 일사천리로 가속될 수 있을 것이며 위협은 가중될 것이다.³¹⁾

<표-5> 중국의 국방비 증가 추세 1945

구 분	2000년	2005년	2011년	2015년
국방비(억 \$)	1149	1295	1430	2382
증가율(%)	12.0	12.6	12.7	12.8
GDP대비(%)	1.34	1.36	2.0	2.0

또한, 중국의 전력건설과 현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해에서 해양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주 위협 세력으로 보고 있는 미 해군에 대적하기 위한 전력 건설과 해외군사기지를 확보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원해에서 작전능력 향상과 미 항모전투단의 위협에 대칭적 대응을 위해 항공모함, 잠

31) 신용, 「중국 군사력 현대화에 따른 한국안보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 합동참모대학(2017.) 24~25쪽.

수함, 구축함, 군수지원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를 건설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기동함대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해양지배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반접근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미사일 전력은 아·태 지역에서 작전하는 미 항모강습단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역내 군사력 균형을 중국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속적으로 해외군사기지를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비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이 공세적 해양전략으로 전환하고 전력 증강을 시작한 1990년대 이후 남사군도 해양영유권 분쟁 양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중국의 해양영유권 분쟁 태도가 공세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사력 사용 횟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한 국가의 군사력 사용은 곧 군사전략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남사군도에서의 분쟁 태도가 공세적으로 바뀌었음은 공세적 해양전략 변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은 해군력의 증강일 것이다.

또한, 중국해군의 현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의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중국군 잠수함의 작전중점이 대양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6>은 중국의 디젤 및 핵잠수함의 증강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20년에도 여전히 디젤잠수함이 전체 잠수함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대식 디젤잠수함에 순항미사일을 장착하여 위협범위를 확대하고, 최근 소음저감기술 발달로 성능을 개량하고 있지만 디젤잠수함은 순항속도가 핵잠수함의 1/3 수준(8노트) 밖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재급유 없이 기동할 수 있는 범위이상에서의 전투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초계 및 공격활동을 위하여 교대해야하는 잠수함 숫자가 1.5배 정도 증가한다. 따라서 디젤잠수함이 이러한 취약성과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잠수함 대비 수적으로 우세한 것은 아직 중국이 1,000마일 이상의 대양으로의 전개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잠수함 전력은 적어도 중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분쟁지역이라 할 수 있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운용하기에 최적화되어 능력이 증강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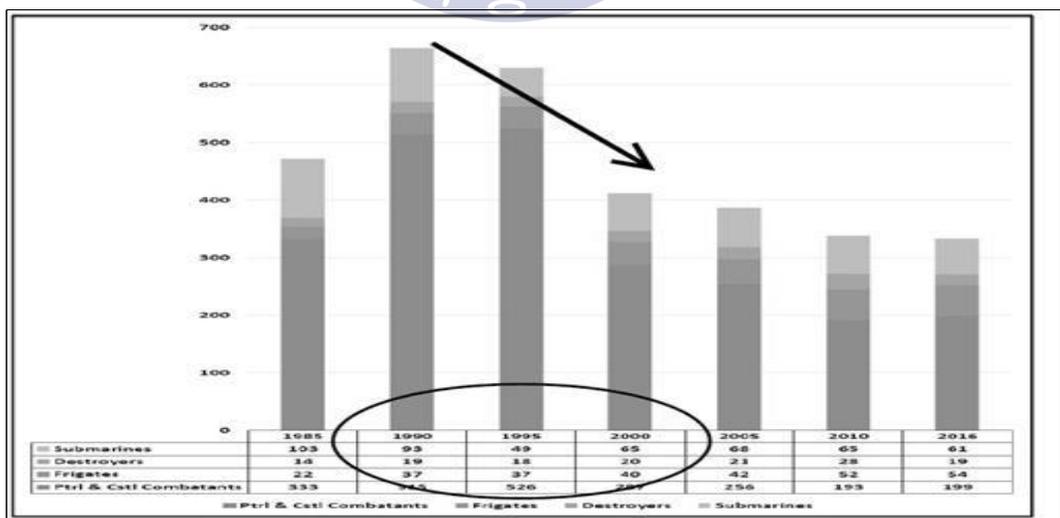
<표-6> 중국의 디젤 및 핵잠수함 증강현황

구 분	2005년	2014년	2020년
디젤잠수함	51	59	63
핵잠수함	8	9	11
계	59	68	74

* 출처 : 미해군정보국(ONI) 보고서(2015), 18쪽.

둘째, 중국해군 함정들의 작전영역이 수평, 수직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0>은 중국해군의 전투함 수와 시대별 전력구조의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중국해군은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전체 함정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이것은 근해임무를 수행하던 주요 전투함의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동기간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전체 숫자를 보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력구조로 인하여 시기부터 작전영역이 점차 원해와 심해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일임무를 근해에서 수행하던 수상함 집단에서 1도련선 내에서 다양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전투함구조로 전환됨은 물론 능력의 향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형성해나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10> 중국전투함 전력보유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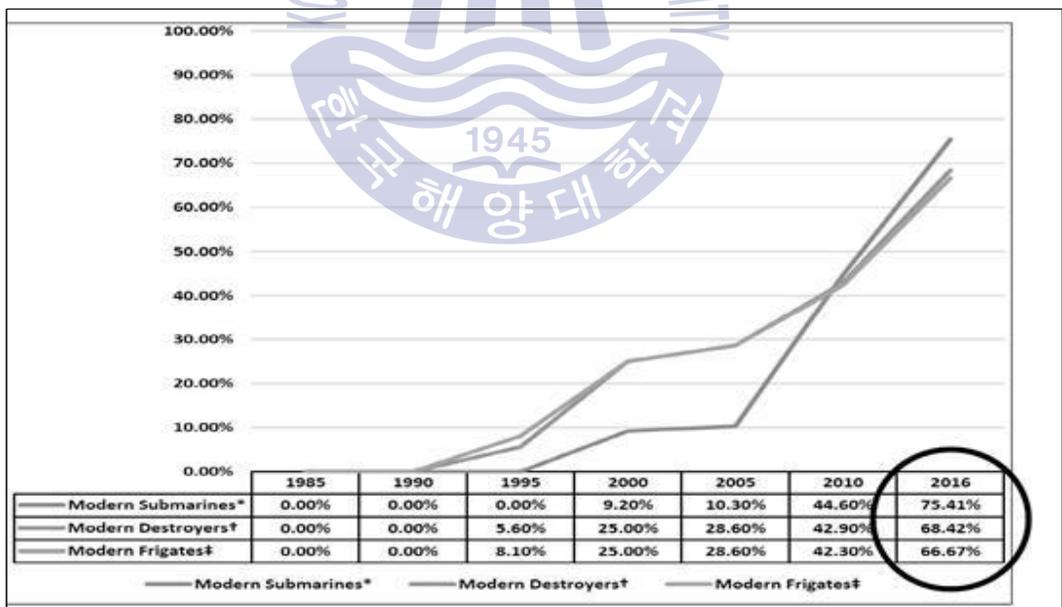


* 출처 : Anthony H. Cordesman & Joseph Kendall(2016), p27.

셋째, 중국해군 현대화 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억제능력의 향상이다. <그림 11>는 중국해군의 현대화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중국해군은 현대화된 주요 전투함정을 지속적으로 획득해 온 결과, 이제 거의 모든 함정에 대해서 60% 이상의 현대화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해군은 현대화를 측정하는 기준(parameter)으로 잠수함의 경우, 저소음과 대함순항미사일(ASCM) 발사기능을 보유해야 하고, 주요전투함정은 적어도 2개의 지역에서 다목적 임무가 가능해야 함을 제시하였다.¹⁹⁾ 이런 특성으로 볼 때, 탑재된 탄도·순항미사일과 감시레이더 등의 증강된 능력은 전투수행의 정교함과 위협으로 이어지고, 이는 적으로 하여금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다.

즉, 전력 투자를 위해 접근하는 국가의 전력을 작전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하여 적의 위협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³²⁾

<그림-11> 중국해군 함정 현대화 비율 추세



* 출처 : IISS, Military Balance 1985-2016

32) 권정욱, 「중국해군(PLAN)의 현대화 추세와 동아시아 지역의 미·중 해군력 균형 전망」, 13~16쪽.

중국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판단할 때 세계대전의 가능성은 없지만, 세계각지에서 국지전 및 무력충돌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만문제 및 주변국과의 영토(도서) 문제, 내부적으로 종교·인종문제, 그리고 주변국과의 국경문제 등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따라서 21세기 국제질서와 아태지역의 안보문제 등을 고려할 때 타국에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무기의 보유와 더불어 미래에 발생 가능한 강도 높은 소규모 국지전 및 군사행동을 위해 신속대응군을 창설, 발전시켜 온 것이다. 또한 현대전은 원거리 전장 환경에서의 선제공격과 속전속결의 군사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개념은 중국군 지도부로 하여금 새로운 첨단 군사과학 기술 개발을 주요 군사건설 중점사업으로 정하게 하였다. 따라서 향후 대만과의 전쟁이나 미·일, 주변국과의 충돌에서 승리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전통적 무기를 최첨단 장비로 대체하고 있으며, 원거리 전자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원거리 운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에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비롯한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항공모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군은 현대전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와 신 장비 등을 구비해나 가면서 동시에 첨단 과학·기술 전쟁에 필요한 새로운 군사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19차 당 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향후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 일정을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기본적 실현’,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적 실현’이라는 일정을 제시하였다. 이는 21세기 중반에 세계적 ‘리더국가(領先國家)’가 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라 분석된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남중국해 지역까지 작전지역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이미 중국군은 상당한 전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³³⁾ 이런 상황 하에서도 중국의 군비증강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33) IISS, 2011. *The Military Balance 2011*, pp.197~198.

형태 또한 해·공군력에 집중하는 군비증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 특히 군 현대화를 위협으로 보는 ‘중국 위협론’이 현실성 없는, 과대 평가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에 있어 중국의 군 현대화는 그 의미가 중요하고 영향 또한 클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제3장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미치는 영향

제1절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I. 동북아 지역안보의 변화

최근 국제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후 아태지역)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비롯해 대만의 신정부 출범 이후 표면화되고 있는 양안관계의 유동성,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국가 간의 영토 분쟁 등 전통안보 분야의 불안정 요인이 갈수록 증가/확산되고 있다. 또한 아태지역에서는 중국의 경제·군사적인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인 국력 쇠퇴로 대변되는 전 세계 차원의 파워 밸런스 변화가 지역 내 국제 정치의 역학 구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인 위상 유지와 대중국 견제라는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전략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 구축 전략이 상호 충돌하면서 지역 내의 한반도, 대만 문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 등 각종 안보 사안에 관한 양국 중심의 대결 구도가 점차 표면화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갈수록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적 행보에 대한 미일 양국의 견제 정책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미일 vs 중국’이라는 대결 구도가 점차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양측 간의 관계를 안보·군사적인 대립 구도로 평가하는 데는 경제적인 상호 의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전통적인 안보 분야를 비롯해 역사, 영토 문제 등에 관한 미일 양국과 중국 간의 상호 국익 및 안보전략적인 이해의 차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을 ‘대화과 협력’보다는 ‘견제와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미중 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대결 양상은 <그림-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반도, 동중국해(센카쿠/다오위다오), 대만해협,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³⁴⁾

<그림-12>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열점 지역



또한, 21세기 중국의 부상이 아태지역의 미·중 경쟁으로 가열되면서 바야흐로 한반도가 다시 한 번 강대국 패권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 후 북한의 핵위협은 일정수준 감소하였고, 평화무드에 돌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북한의 핵 위협은 존재하며, 혈맹의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 1992년 수교 이후 미·일 합친 무역양보다 많은 최고의 교역국으로 떠오르는 중국 사이에 놓인 한국의 고민과 딜레마가 커지는 이유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중 관계는 경제·군사적으로 위협한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모습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물론 중국과 미국이 본격적인 군사 충돌에 이를 가능성을 여전히 크지 않지만 아시아와 동북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중간의 경쟁과 갈등의 대립구도는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과제와 도전으로 다가온다.³⁴⁾

34) 한국국방연구원, 「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 동향」, 한국국방연구원(2016), 9~11쪽 재인용.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가장 중요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내 강대국들의 대외전략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2016년 대선 이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평가와 향후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신고립주의 외교 기조 및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 되면서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중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동맹 관계와 주한미군 주둔 문제, 남한의 군사비 부담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이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³⁵⁾ 또한,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전략이 미국의 ‘다이아몬드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응하는 것으로 중국은 특히 ‘진주목걸이’로 명칭되는 해상실크로드(一路)를 통제하겠다고 구상중이며 이는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일대 통제를 통해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고 자국의 해상이익을 극대화 하려는데 대응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내놓았고, 트럼프는 이를 더 발전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18일 발표한 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적시된 것처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으로 유지하겠다고 언급하였고 중국의 영해라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도 어느 국가든지 자유로운 항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연결해 중국의 패권 확장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하였다. 이 국가들을 연결하면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며 이를 일본 아베 총리는 이를 ‘다이아몬드’ 전략이라고 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1990년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와 호주의 정치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중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인도양의 해상교통로(SLOC)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개념보다 광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개념은 단순히 지리적인 차원보다는 첫째,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인구대국이자 미국의 9번째 규모의 경제교역국인 인도를 미국의 아시아 역내 안보환경에 끌어들이고, 둘째, 중동지역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교통로로서의 인도양을 포함함으로써 전략적 차원에서

35) 신성호, 「한반도 안보상황 전개와 한국의 대응방안」, 2017-8차 KIMA FORUM, 한국군사문제연구원(2017), 1~2쪽 재인용.

36)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6 동아시아 전략평가」,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16), 54쪽.

의 해양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미국이 중시하는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개념은 말 그대로 ‘해양 아시아’(maritime Asia)를 표현하고 있다. 셋째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증대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은 APEC 정상회담 이후 마닐라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와 아세안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호주·일본과 테러·해양안보·북한 문제 등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으나 ‘관련 있는 당사자’로서 중국을 제외시킨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태평양’ 개념은 미국이 위의 3개국과 다이아몬드 형태의 4각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골자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³⁷⁾

<그림-13>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러한 3가지 의도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도는 아시아지역 전체의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여 이제까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던 지역과 분야(예를 들면, 해상교통로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나 세 번째 의도는 다분히 과거의 냉전적 사고를 반영한다. 그리하여 중국과 ‘인도-태평양’ 개념에

37) 이서항, 「미국의 ‘인도-태평양’구상과 한국의 과제」,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17.), 검색주소 : <http://www.kims.or.kr/per105/#top>.

대해 비판적인 일부 학자들은 이 개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포용보다는 우군과 적군을 가르는 지정학적 틀’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구상 하에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 우선’을 내세우는 양자주의,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국 협력을 이끌어내는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II. 동북아 긴장고조 및 군비경쟁 가속화

2018년 9월 30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어명 : 난사군도)에서 미국의 구축함 디케이더함과 중국의 구축함 란저우함이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미 구축함은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중이었고 중국은 이를 영해침범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면서 충돌직전까지 가는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남중국해는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연간 해상물동량이 3조 달러를 넘는 해상 요충지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남중국해 주변국은 자원 영유권과 어업권 등을 놓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세우고 비행훈련 등을 하며 이 해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지만, 미국은 군함 등을 동원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이에 맞서고 있다. 지난 8월에도 미국 해군의 대잠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상공을 날자 중국군이 “즉시 떠나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다.³⁸⁾ 이것은 현재 중국과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대립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해역에서 군사적·비군사적 충돌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은 사실상 탈냉전 이후 구소련의 영역을 중국이 대체하면서 나타난 구조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경제발전과 병행하여 추진한 군사력의 강화는 사실상 주변국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군사력 강화는 불가피하게 지역 내 군사력 균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군비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군의 군사적 능력이 크게 증진

38) 연합뉴스, 「中, 남중국해서 美군함 '위협'하더니 日군함엔 "좋은 아침"」, 연합뉴스 (2018.11.5.) 검색주소 :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5076500074?input=1179m>.

될 전망으로, 이는 주변국 안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력 현대화 노력에도 현시점에서 중국의 군사력은 전반적으로 미국 등 다른 군사강국에 크게 뒤쳐져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앞서 논의한 비대칭 전략에 기초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의 정밀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했으며 향후 5년을 전후해 자국의 우주자산을 활용하여 주요 강대국과 주변지역에 대한 군사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전략조기경보, 군사항공우주, 방공 미사일 방어 등 신형군사역량 강화를 서두르고 있고, 신개념 무기의 실전 활용에도 적극적이어서, 시진핑 집권 기간 중국의 군사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군의 노력은 주변국 및 주요 강대국의 군사력 강화 요구를 부채질 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³⁹⁾ 특히, 중국이 세 척의 항모를 구비하게 되면 중국 해군의 작전범위는 서태평양과 인도양까지 확대될 것이며, 국방 및 군 현대화를 마무리 짓는 21세기 중반 이전에 대양해군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이버 및 우주공간에서의 군사능력 강화, 해군의 활동범위 확대 등은 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군비를 증강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7> 중국·미국·일본의 국방비 비교⁴⁰⁾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0	2005	2010	2015
중 국	145	353	764	1,415
중국(실국방비)	218	530	1,146	2,123
미국	3,005	5,050	6,969	5,340
일본	456	411	528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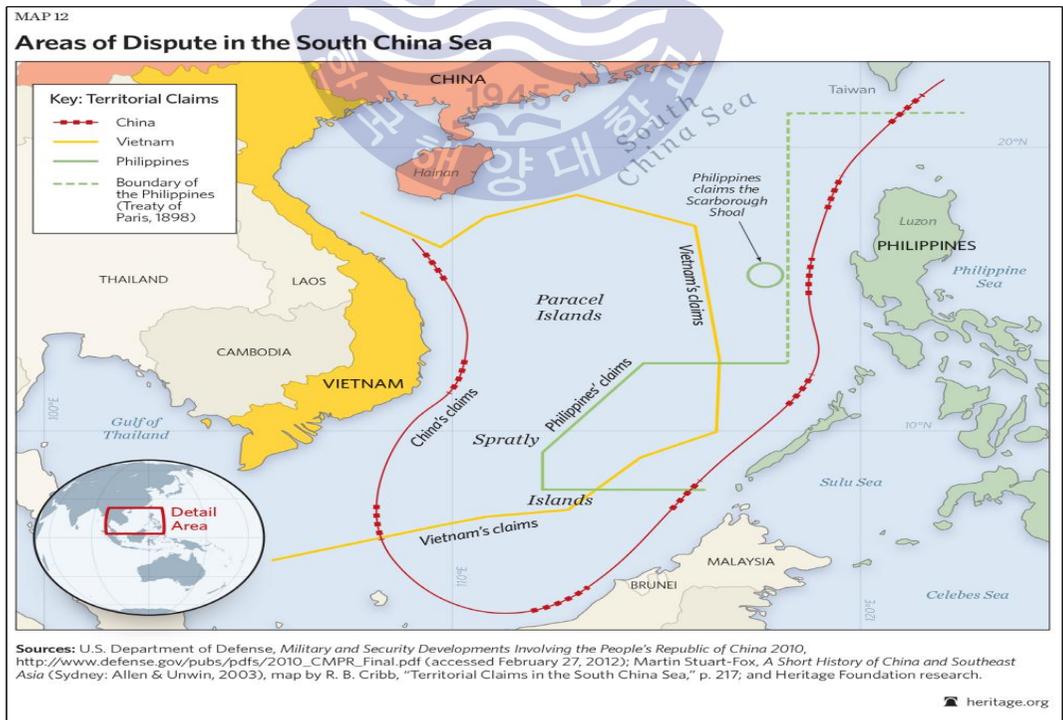
실제로 한국 주변 즉, 동아시아 지역이 무서운 곳으로 변하고 있다. 2010년 중국 어선의 충돌 사건 이후 악화되기 시작한 조어도(센카쿠/다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은 중일 관계가 군사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

39) 이상국,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군몽 구상과 군사안보적 함의」, (2015), 31쪽.

40) 박창희, 「미·일·중·러의 군사전략」,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엮음, 한울 아카데미(2018), 193쪽.

아닐 정도로 고조되어 왔다. 2012년 9월 일본은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를 국유화하여 중국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현재까지 군사적 대치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를 기점으로 하는 영해선을 발표하고, 이 해역과 이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해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함으로써 대응하였다. 한국 역시 이어도 주변 해역을 포함하도록 방공식별 구역을 확장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2014년 정상회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이어도를 포함하는 해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중국과 센카쿠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등 남중국해의 분쟁 상대국들까지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해역 항모 배치, 영유권 분쟁도서 인근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하였고,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까지 미 해군 함정의 60%와 항모 6척을 아태지역에 배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림-14>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지역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대만 등 아시아 5개국의 국방비 지출이 2000년대 이후 10년 새 2배 늘었다는 보고서를 냈으며 이들 국가가 대규모 장비 도입으로 질보다 양을 우선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며 세계의 최첨단 무기가 아시아로 집결하고 있는 현상을 꼬집었다. 해상 영토 분쟁과 불확실한 안보 상황 등 지역이 불안해지면서 동아시아 군비경쟁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변한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군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외교정책 수단으로서 군사력이 보다 쉽게, 자주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증강과 패권주의 확대는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중국의 군비확장으로 아시아에서 군사력 균형이 바뀔에 따라 미국이 대서양의 해군력을 태평양으로 이전하고, 자연스럽게 G2 국가 간 불신과 외교적 갈등이 자주 초래된다.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군 현대화와 일본이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보통국가화, 동북아 지역에서 특정 국가의 패권 추구를 억제한다는 미국의 안보전략 기조 등 3개의 역학 요인이 각각 현실적으로 역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현실주의 국제 시각에서 보면, 국가의 정치·경제력이 중국적으로 투영되는 곳이 군비 분야이며, 이것이 주변국에 안보 딜레마를 자극한다. 즉 군비증강은 경제력과 기술력의 표상이며 군비경쟁은 사실상 경제력과 기술력의 경쟁과 다를 바 없다. 중국의 첨단 군사력 증강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역내 분쟁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중국군의 현대화에 따른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및 한반도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중국군의 현대화는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인 군비증강과 더불어 불안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 안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⁴¹⁾

Ⅲ. 동북아 해양전략 및 해군력 군비경쟁 강화

최근 동북아 해양은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 등 해군력 증강과 공세적 해양팽

41) 심석영, 「시진핑 시기의 중국군 현대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2016.12.), 79~83쪽 재인용.

창정책 추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SLBM 개발 등에 대비한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 추가 건조 등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은 21세기 동북아의 새로운 해군군비경쟁의 모습이다.

특히 중국은 제19차 당대회에서 2050년 중국 꿈 달성을 위해 해군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중국이 역내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미국주도의 해양질서에 도전하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아·태 해양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은 역내 해양에서 분쟁 시 미국의 해군력 투사를 저지하기 위해 A2/AD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해군의 신형 Shang급 SSN과 Song급 재래식 잠수함, Luyang-III 중국형 이지스 구축함, 제4세대 전투기 등은 A2/AD 전략 구현의 핵심전력이 될 것이다.

<그림-15>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및 중국의 인공섬 건설현황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계기로 보통국가화를 위해 헌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며 중국 해군의 센카쿠열도 탈환을 차단하고, 동·남중국해의 SLOC 보호를 위해 현 잠수함을 18척에서 22척으로 증강 중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도 6척에서 2020년 초에 2척을 추가해 8척을 유지하고, 현재 보유 중인 6척에는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SM-3를 탑재하였으며, 추가로 도입되는 이지스함에도 SM-3 IIA/SM-6를 탑재할 계획이다.

<표-8> 한국-미국-일본-중국 해군의 이지스함 능력 비교⁴²⁾

구 분	전장 (m)	만재톤수 (ton)	레이더	수직발사 관(VLS)	척수
중국, Luyang-III(구축함)	157	7,500	Type 346A	64	4
중국, Type-055(순양함)	180	13,000	Type 346A	128	4
일본, Atago	164.9	10,000	SPY-1D(V)	96	2
일본, Kongo	161	9,637	SPY-1D	90	4
미국, Areigh Burke(IIA)	155.3	9,426	SPY-1D(V)	96	62
한국, 세종대왕급	165.9	10,000	SPY-1D(V)	128	3

한편 러시아는 미래를 위해 북극해와 해양 자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신동방정책 추진을 위해 태평양 함대에 Borey급 SSBN를 전개시키는 등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해양독트린을 선언하는 등 해양에 집중하고 있으나 크림반도 병합이후 지속적인 서방의 경제제재와 석유 가격의 하락 등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잠수함, 항공모함, 구축함 건조가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조되고 있는 함정은 가능한 태평양 함대에 배치하려 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중시전략’을 유지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42) 김덕기, 「미국 해군정보국 보고서를 통해서 본 중국 해군:개괄적 함의」, KIDA 주간국방논단, 한국국방연구원(2015.), 4쪽.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해양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 적극적인 해양전략을 차단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해양협력을 돈독히 하고있다. 아울러 중국의 A2/AD 전력 대응을 위해 괌에 SSN 전개를 강화하며, 싱가포르에 LCS(Littoral Combat Ship)와 호주에 해병기동부대를 순환배치하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이지스함의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⁴³⁾

제2절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국가의 부 창출을 위해 해양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해양 전략을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의 ‘적극적 근해방어’로 이미 전환하였다. 또한 공세적 해양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원해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 해양전략 변화는 해양영유권 분쟁에 영향을 미쳐 무력 충돌이 증가하고 분쟁 발생가능성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해양에서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확보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중국의 해양을 향한 대외팽창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더욱 공세적인 양상을 띠 것이다. 이에 중국과 해양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게도 상당한 안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⁴⁴⁾

또한, 중국의 공세적 해양전략에 따른 해군력의 급속한 증강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분쟁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한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서해에서 이어도를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EEZ)획정, 대륙붕 공동개발, 어업협정 등과 같은 문제에서 이견이 있어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 양국 간 EEZ 경계획정에 대해 한국은 양국 영토 간의 중간선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서해(황해)의 동도를 지점으로 경계선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양국

43) 김덕기, 「동북아 해군력 군비경쟁」, 통권 43호(Vol.21, Summer), STRATEGY 21(2018), 166~167쪽.

44) 안덕열, 「중국의 공세적 해양전략 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0쪽.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⁴⁵⁾ 현재 한·중 간 해양영유권 분쟁은 표면적으로 강하게 표출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중국이 자신들의 주권과 영토분쟁에서는 물러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분쟁이 확대될지 그 미래는 짐작하기 어렵다. 한·중간 EEZ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갈등의 중심에 있는 곳은 바로 이어도이다. 중국과 한국은 이어도 문제가 영토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2006년에 합의했다. 이는 섬이 아니라 암초이기 때문이며 섬과는 달리 암초는 유엔해양법상 영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어도는 한·중 200해리 수역 내 겹치는 해역에 있으므로 해상경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데에도 합의했다.⁴⁶⁾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국의 힘을 현시함으로써 이어도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중 해양 분쟁은 중국과 잠재적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요인이다. 한국과 중국의 서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획정 문제는 한국의 중강선 주장과 중국의 대륙붕 연장선 주장으로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해에서의 해저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의 강대국화는 이러한 자신의 해양관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이를 해군력이라는 군사력의 형태로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관할권 주장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분쟁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 동중국해에서 해저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하여 일본과 견해를 크게 달리하고 있으며 향후 한·중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문제도 해저 개발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대외교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은 대부분 남중국해를 통과하여 수송하고 있다. 테러 등 국제적 범죄를 제외하고는 남중국해 해상수송로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자신의 의자와 관계없이 해양관할권과 관련한 분쟁이나 미국과의 세력경쟁과 관련하여 남중국해에서의 해상수송로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현재 해상수송로의 안전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45) 윤석준, 「중국 해군력의 현대화와 한국해군에 대한 영향」,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09.), 188~190쪽.

46) 김정현, 「중국의 해양영토분쟁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해양연구소(2013), 48쪽.

미국이 제공하는 해양안보 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이러한 안정장치는 보다 약화 될 수 있으며, 해상 교통로의 보호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사활적 이익이다.

또한 중국의 급성장을 통한 해군력의 발전을 배경으로 주변국 해군력보다 강한 해군력을 운용함으로써 해양영유권 분쟁을 치르고 있는 아세안국가들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 간, 그리고 중국과 인도 간 등 지역 내 국가 간 “해군력 증강 경쟁” 또는 “해군력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귀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세는 한국에 과도 해군력 현대화 및 전력증강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하게 할 것이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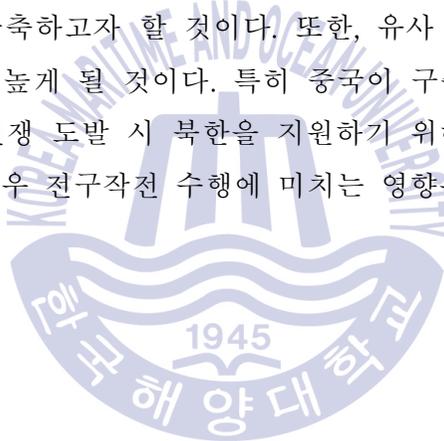
최근 청해부대 26진 과병임무를 마치고 복귀중인 문무대왕함이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인 시사군도(西沙群島)를 침범했다고 항의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2018년 9월 16일, 문무대왕함이 태풍 ‘망쿳’의 경로를 피해 기존항로에서 벗어나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 시사군도)에 접근하였다. 이 해역은 중국이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중국 해군은 영해 침범을 경고하기 위해 우리 측에 교신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문무대왕함은 10여분 가량 해당 해역을 지나갔다. 중국 국방부 측은 당시 “한국 구축함이 사전 허가 없이 시사군도 12해리(1해리는 1.852km) 영역에 진입함으로써 중국 법률을 위반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고 중국도 이를 이해했다”고 밝혔다. 국제법에 따르면 인도적 목적이나 순수한 목적이라면 사전 허가가 없더라도 외국 군함의 영해 경유를 허용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러 침범한 것이 아니고 태풍을 피하기 위한 것 이었다”며 “주변에 어선들도 많아서 충돌을 피하려면 서둘러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⁴⁸⁾ 이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남중국해 인근국가의 영유권 분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의 일

47) 최봉재, 「중국의 해양력 증강과 한국 해군력 발전방향」, 연구논문, 국방대학교(2014), 44~46쪽.

48) 최태범, 「문무대왕함, 태풍피하다 中영해침범」, 머니투데이(2018.10.26.), 검색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2621461829029&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이 아니며, 우리 수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남방항로 해역에서 이러한 파찰은 앞으로도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중국의 해양력 신장과 해군력 증강, 반접근/거부(A2/AD) 전략에 따라 우리 정부와 해군에게 많은 도전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대북상황 발생 시 군사적 지원 및 유사 시 개입 가능성이다.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인 혈맹관계로서 우호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비록 현재의 양측 간의 관계가 전과 같이 않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후견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이 만약 항모전투단을 보유하여 근해에서 자유롭게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경우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력균형 체제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유사 시 직접 군사적 개입을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이 구축한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전력으로 북한의 전쟁 도발 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의 접근을 차단할 경우 전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제4장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대응방안

2000년대가 시작된 이후 국제정치의 가장 큰 화두였던 동시에 가장 많은 학술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주제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였다. 중국이 궁극적으로 차세대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 미국이 결코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심각한 패권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중국의 발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 패권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 등 온갖 견해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단순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국가 전략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미국에게는 국가안보를 크게 의존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과 경제 의존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도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지 않고 상호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국제정치의 진행이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부상은 필히 미국의 견제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미중관계가 갈등상태로 빠져들어 가는 경우, 양국 모두가 심각한 이익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할 지도 모른다.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이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위협과 도전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국제질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국가의 발전과 군사력의 증강이 주변국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지역 국가와의 분쟁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에 유리하게 해결하고자 하며, 미국 주도의 질서에도 도전하여 중국 중심의 질서를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요한 안보위협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배력 강화, 동북공정의 가속화, 북한의 군사적 지원 및 유사시 개입, 한국의 경제적 의존도 심화, 미중 간 경쟁 및 갈등 구조의 심화, 중국 주도의 지역질서 개편 가능성 등이 될 것이다.⁴⁹⁾

중국의 해양전략 변화와 그에 따른 해군력 증강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은 물론 장기적으로 통일 한국의 안보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우리의 지척에 미국 다음으로 군사강대국인 중국이 자국의 해양권익을 위해 각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군력 성장이라는 함의 뒷받침을 통해 해양권익을 실현을 가시화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해양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적절한 해군력을 건설하여 직접적인 군사력을 통한 대응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는 적절한 규모의 해군력 확보는 어려움이 상존하기에 미국과의 동맹관계, 주변국가간의 상호 밀접한 경제관계 등 정치·외교를 통한 세력균형 유지의 전략적인 접근 등 비군사적 방안도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⁵⁰⁾

제1절 동북아 지역 국가 간 협력적 해양안보체계 구축

현재 중국은 역내 3개 국가(일본, 필리핀, 베트남)와 해양영토 분쟁 중이며, 러시아는 일본과 해양영토 분쟁을 진행 중이다. 한국은 독도와 마라도를 놓고 일본과 분쟁 중이며,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한국의 이어도가 포함되면서 중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해양영토 분쟁은 해양자원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자국의 대외적 영향력 확산을 위한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영토분쟁의 심화를 막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인 러시아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대상으로 고려하는 EU를 우호세력으로 확보한다면 대화를 통해 갈등의 확산을 사전에 막고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전시대 이후의 국가안보전략은 단순히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획득하는 방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외교, 경제, 군사,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49) 최봉재, 「중국의 해양력 증강과 한국 해군력 발전방향」, 41~42쪽.

50) 안덕열, 「중국의 공세적 해양전략 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2쪽.

다른 국가들과 협력 및 경쟁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과 경쟁의 패러다임이 작용하는 탈 냉전시에는 위협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가 쉽지 않기에 포괄적 개념을 국가안보전략 수립에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구성원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역내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2인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과 이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의 충돌은 역내 안보의 유동성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상황 속에서 일본과 중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국가화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복원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자국 이익 중심적인 정책은 냉전의 종식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2012년 역내 강대국들의 일관적인 정권교체로 인해 더욱 심해진 자국 이익 편향적인 정책은 역내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생존과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내 안보협의체 등의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안보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국가안보전략의 유연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목표 달성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지금까지 군사, 경제, 정치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상호협력을 해오고 있고, 중국은 북한 문제와 경제 분야에서 상호협력이 필요한 국가이다. 이처럼 한국은 중요한 두 나라의 충돌 상황에서 균형 외교를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 입장일 수 있다. 문제는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속에서 균형외교를 통해 국가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합리적 대안중 하나는 전통적 안보개념에 충실한 역내 안보집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핵심 참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과거 냉전기와 달리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 분야의 경우 여타 분야에 비해 더 깊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존성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¹⁾

한국의 안보문제는 한반도와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주변 4강의 이해관계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국제화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과, ‘당사자 간 해결 원칙’이 지향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양자는

51) 한용호, 「동북아 정세변화와 국가안보 전략」, 정책연구보고서, 국방대학교(2017.), 31~33쪽.

상호 조화·보완관계에 있다. 또한 한반도 안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역내 다자주의와 양자주의가 균형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한반도 통일 문제의 해결에서도 다자간 협력을 통한 주변국들의 보장과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로 인해 좌우되거나, 영향받아왔던 과거 역사적 경험이 많았다. 동북아 안보환경을 우리가 지향코자 하는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고자 하는 것이 오랜 한국의 안보정책의 방향이다. 동북아에 한정된 다자체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세력들의 안보협력을 이끌어 내어 평화체제를 이룩하자는 것으로서 한반도 안보문제와 이후 통일문제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동북아 다자체제가 추진될 경우 기존의 한미동맹의 가치와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다. 한국의 안보상황이 한미동맹의 약화를 허용할 단계에 있지 않다는데 딜레마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 양자체제를 다자체제로 변화시켜 나감에 있어 미국 스스로도 양자와 다자체제가 병행될 수 있다는 유동적 견해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양자체제를 중심한 양대 진영 간의 결속력 강화는 오히려 역내 다자체제 구축을 촉진할 수 있음을 유럽의 예에서 알 수 있다. 동북아 다자체제 구축을 추진하면서 동북아의 조정자, 중개자로서의 일정한 역할 분담을 자임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국과의 관계-한미동맹이다. 동북아 다자체제 구성을 위해서는 미·중·일,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의지와 리더십이 결정적이고 또 이는 한국의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크게 상충하지 않도록 추진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한해 무역 교역량이 1,500억 달러(미국은 700억 달러)에 규모인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우리 경제가 살 길이 없다. 또한 중국과의 대립과 갈등관계를 통해서도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국은 자명한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역내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의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안보가 한미동맹에 근거하여 지난 50여 년간 안정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다가올 미래는 분명 다른 양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화평굴기(和平崛起), 화평발전(和平發展),’ 기치 아래 연간 7~8%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군의 현대화는 분명히 지역에서 미국과 견줄 수 있는 패권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하며, 일본 또한 ‘보통국가’를 천명하며, 미국의 대중국 공동대처라는 신안보 개념을 통한 강력한 후원하에 자위권의 확대를 통해 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동북아의 냉혹한 현실에서 미국의 외교우산 아래에만 머문다는 것은 현상에 안주한 지극히 안일한 외교안보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역내 패권경쟁으로부터 지역 안정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이끌어 내기위해 한국이 일정부분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외교 그늘에서 벗어나 지역 국가들과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균형자, 조정자, 중추적 동반자의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 동북아 다자체제(Multilateral Mechanism)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북아와 동아시아를 구분하는 접근법 보다는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는 동아시아 공동체는 동아시아 공동체대로 동북아 공동체는 동북아 공동체대로 의미가 있다. ASEAN+3에서의 3개국 정상회담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세력의 모임으로써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방향으로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 또한 비교적 이해관계가 적은 한국과 러시아간에 특정 이슈를 개발하여 협력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궁극적으로 동북아 다자체제를 촉진하는 촉매체로 작용할 수 있다. 역내 국가들 간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역외 및 역내 다자협력의 중첩은 동북아 다자체제 형성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다. 궁극적인 방향이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 안보와 지역안보를 논의하고 안정을 추구하고자 함은 변함이 없지만 나아가는 경로 상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다양한 접촉과 대화 노력과 경험의 축적을 통한 신뢰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냉혹한 안보 외교 무대에서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로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안보 논리의 구축을 선행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통한 균형외교를 펼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⁵²⁾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일본이나, ASEAN, 호주 등 무역국가로서 해양안보 이익과 자유·민주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활동을 더욱

52) 신웅, 「중국 군사력 현대화에 따른 한국안보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 합동군사대학교 (2017.), 36~41쪽 주요내용 발췌.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해군과 해경은 지역 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활동이나 림팩(RimPac) 훈련 등 다국 간 해양안보 협력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에서의 법 집행능력을 지원함으로써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 지역 내 더 많은 국가들이 상호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 할수록 특정국가가 아·태 지역을 주도하는 것은 더욱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⁵³⁾ 또한, 동남아 국가 해군 간 방산 및 연합훈련, 상호 방문 등의 교류를 통한 유대관계 강화도 잠재적 중국의 해양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 해군의 퇴역 함정을 동남아 국가에게 양도중에 있으며, 순항훈련 및 청해부대 등 해군함정의 주요도시 방문,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위탁교육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10개국에 한국 해군의 퇴역함정을 양도하였으며, 그 중 필리핀, 베트남 등 5개 동아시아 국가에 퇴역함정 30여척을 양도하였고 이는 동남아시아 중소해군 국가의 현대화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 해군 간 유대관계 강화 및 방산(주로 군함) 역량확대를 통한 국가이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표-9> 한국 해군 퇴역함정 양도현황⁵⁴⁾

양도국가	주요함형	척수	계
필리핀	제비급 고속정 참수리급 고속정 물개급 군수지원정 포항급 초계함	12척 8척 1척 1척	22척
방글라데시	참수리급 고속정	4척	4척
캄보디아	항만경비정	3척	3척
베트남	포항급 초계함	1척	1척
동티모르	참수리급 고속정 항만경비정	1척 2척	3척
카자흐스탄, 가나, 콜롬비아, 페루, 이집트	포항급 초계함 등	7척	7척
계		40척	

53) 정호섭, 「한국의 해양안보:1998년과 2018년」, 통권 43호, STRATEGY 21,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18.), 78쪽.

54) 김홍현 등 6명, 「Defense Times KOREA 11월호」, Defense Times KOREA(2018.), 104~115쪽 일부내용 발췌.

제2절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동북아 안보질서는 미국 패권이 유지되는 일超多강체제(一超多强體制)를 유지하거나,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 중심의 경쟁과 협력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동북아 역내 안보협력이 안정적으로 모색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형성 가능성과 반대로 불균형적인 세력균형 상태를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 주도의 구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전망이다. 이는 한국에게 향후에도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보장하는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 내지 강화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역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한국의 국익에 유리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질서를 구축하는데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⁵⁵⁾ 만일 미·중 갈등으로 인해 동북아질서가 다강체제(多强體制)로 변모한다면 한국의 국익과 안보 수호차원에서 한·미 동맹은 더욱 긴요해진다. 또한, 미·중 협력 구도 하에서도 중·일 갈등을 비롯한 역내 불안정성은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안정적인 역내 질서 창출을 위한 다각적, 다차원적, 다변적 안보협력 노력과 함께 한·미 동맹의 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경제 통합, 한반도 통일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포괄적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과거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향후 한·미 동맹 역시 한국 외교의 중요한 자산이다.

미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우위를 통해 동맹국의 힘을 적절히 활용하고자 한다. 즉 미국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위협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21세기 미국의 해양의제를 대응하고자 한다. 최근 미국 해군이 간행하는 각종 군사전략 보고서들은 예외 없이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 국들과 협력함으로써 위협에 대처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주변의 국가들 대부분이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에 불안을 느끼는 작금의 상황에서 미국은 보다 효과적으로 중국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중반 이후 미국은 필리핀, 베트남과의 관계를 더욱 협력적인 관계로 진전시키

55) 박창권 외, 「한국의 안보와 국방」, 한국국방연구원(2009.), 324~327쪽.

고 있으며 호주, 일본 등과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최근 수년간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 때문에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가 있기는 했지만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중국이 보인 태도는 중국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기 보다는 한국의 전략적 위협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 중국과 한국이 본질적으로 상호 혐오하는 나라여서가 아닌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결코 진정한 동맹국, 우호국이 될 수 없는 것이다.⁵⁶⁾

동북아 지역은 현재 일초다극체계이며 남북한은 동북아에서 양극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또한, 국력의 기간은 영토나 인구가 절대적인 열세로 이것을 극복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강대국들과의 동맹이 될 것이다. 동북아 열강이 힘의 정치와 군비경쟁에 나설 경우, 우리는 외교 안보전략의 중대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일 갈등, 미·중 간 패권경쟁에서 한국의 최대의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성장과 동북아 역내 국가 간의 갈등은 한미 동맹에 상당한 도전과 변화, 때로는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⁵⁷⁾

한국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우리의 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명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때로는 한국이 중국과의 양자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독자적, 직접적 대응보다는 한미동맹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레버러지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 개혁과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중국의 군사 개혁과 군사력 증강에 정면으로 대립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중국에 대해 ‘협력과 경쟁’의 병행전략을 채택하고

56) 이춘근,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2016-17」,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16.12.), 295~297쪽

57) 최영기,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위협분석과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논문, 합동군사대학교(2017), 39쪽.

있듯이, 한미동맹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한미는 중국군의 군사 개혁이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국제규범과 질서에 부합되도록 지속 요구해야 하며, 동시에 한미는 중국과의 교류협력, 대화를 통해 신뢰구축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이 대두되면서, 우리의 서해 및 이어도 등을 둘러싼 한중간 잠재적 갈등에 대해 우리의 대응전략을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중국이 항모 운용체계를 완전히 갖추고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이 미국의 원거리 전력투사능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우리의 국익 실현을 위한 목소리와 입지는 더욱 작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해 및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 한미동맹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미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능력을 갖추는데 주어진 시간도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인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이 역내 안보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해 가나는 것은 중국의 군사 개혁과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억제능력을 보장해 줄 것이다. 중국의 군사 개혁과 군사력 증강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중국도 한미동맹의 목소리를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 군사과학기술 혁신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한미 공동 군사 과학기술 기획, 연구개발, 전력화 등 전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첨단 능력 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저비용으로 달성토록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 등 제3국의 전자전, 사이버 작전, 우주 영역을 활용한 정보작전 등에 대해 한미가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⁵⁸⁾

제3절 해양정책 강화 및 해군력 증강

중국의 해양전략 변화와 그에 따른 해군력 증강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은 물론 장기적으로 통일 한국의 안보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이다. 우리의 지척에 미국 다음으로 군사강대국인 중국이 자국의 해양권의

58) 신경수, 「중국의 군사 개혁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한미동맹의 대응 방향」, 통권 제94호, 군사논단, 한국군사학회(2018.), 146~148쪽 주요내용 발췌.

을 위해 각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군력 성장이라는 힘의 뒷받침을 통해 해양 권익 실현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해양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적절한 해군력을 건설하여 직접적인 군사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중국과 맞대응이 가능한 규모의 해군력 확보는 어려움이 상존하기에 미국과의 동맹관계, 주변국가간의 상호 밀접한 경제관계 등 정치·외교를 통한 세력균형 유지의 전략적인 접근 등 비군사적인 방안도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남중국해를 포함한 주변국 간 해양 분쟁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현재는 물론 과거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 분쟁의 당사국으로서 동아시아 모든 나라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해양 안보를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21세기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 노력,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중국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는 망언 수준의 언급을 한 정치인들도 여럿 있지만 현재 한국의 해군력은 주변국 해군에 비해 너무나 미약하다. 아래 표는 한국 해군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표-10> 한국 주변국 해군력(톤)⁵⁹⁾

구 분	규 모
중국 해군	1,469,000
미국 태평양 함대	1,028,000
일본 해상자위대	453,000
대만 해군	217,000
한국 해군	193,000

* 출처 : 2015 일본방위백서

59) 각국의 해군력을 톤수만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비교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대략 중국은 양적으로는 막강하나 질적으로는 취약하고, 일본 해군은 양적으로는 중국보다 적으나 질적으로 막강하고, 미국 해군은 질과 양이 모두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해군은 양·질적으로 모두 주변국 해군에 열세이나 점차 현대화 및 최신함 건조를 통하여 해군력을 건설 중에 있다.

한국해군은 물론 공세적인 군사력을 지향하지 않고 있지만 서해, 남해, 동해에서 중국, 일본 해군력을 방어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우리 해군은 질적으로 중국 해군을 압도하지 못하며 톤수로는 중국 해군의 겨우 1/8 수준이다. 해군력의 건설은 군함의 건조와 더불어 해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기지의 건설 또한 의미한다. 미국이 전 세계 다수 국가들과 동맹을 체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기지를 확보 위해서다. 21세기 대한민국 해양안보를 위해 막강한 해군력과 더불어 좋은 조건의 해군기지 확보는 필수적이다.

I. 주변국에 대응하는 해군력 증강

우선 우리해군은 주변국이 일본, 중국이라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을 압도하는 해군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 해군은 주변국으로부터 야기되는 해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특히 비대칭 전력의 대표적인 잠수함 전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해군력 건설은 현존 북한위협에도 대처할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과 해양안보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실 우리 해군의 해군력은 대북(對北)용과 對 주변국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정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두 부분을 충족해야하는 전력 투자를 해왔다. 과거 대양해군(大洋海軍)을 추구하다 1, 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일련의 사태로 ‘아마당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당장 밖 멀리를 바라본단 말인가’라는 논리는 자주적인 해군력 건설과 미래 위협에 대비한 전력 건설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한국은 한반도 안정화를 위해 중국과의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억제하여 분쟁이 군사도발 및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전방위적 신뢰 및 협력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적 동맹·협력체제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해양력 증강에 따른 군사적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이 있어야 하며 그 중심은 해군력이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 또는 통일을 대비하면서 주변국, 특히 중국과 해양에서의 잠재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거부적 억제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과의 국지분쟁을 포함한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국군 단독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나, 중국의 현재 해군력 수준이나 향후 해군력 증강 추세를 감안할 때 제 분야에서의 억제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상군에 대비한 편중된 국방 분야 대비태세의 모습에서 중·장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해·공군력 증강 중심의 군사력 발전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에서의 국지전 또는 전쟁 발발 억제를 위하여 평시 중국과의 잠재적 마찰 요소를 안고 있는 배타적 경제구역에 대한 해상 초계·감시활동과 해상에서의 해·공군 합동훈련 등을 통한 무력시위 성격의 군사작전 등을 통한 억제 능력을 발휘하고, 한·중 군사력 간 마찰 발생 시 초기에 현장 중심의 초동조치와 군사적 충돌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대양에서의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해군력 증강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장에서의 즉시적이고 적시적인 전력투사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대응 가능한 대형함정 위주의 해군전력과 지휘체계 및 항공전력 확보도 시급하다.⁶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해군은 비용 對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독자적인 첨단 비대칭 해군력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즉 한국 해군보다 우세한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 수적, 양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략적 차원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한 전력 건설을 통한 대응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과 동등한 해군력 건설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세한 중국 해군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 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국의 해군력에 대항하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함정 및 육상기지의 장거리 초음속 대함·대지미사일 능력 확보, 유사시 수중에서 장거리·장시간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고 전략·전술적 목표물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 강화, 원해까지 정찰감시 및 대응이 가능한 해군의 항공초계능력 확보, 필요 시 중국의 주요 항만 및 함정에 치명상을 줄 수 있고 각종 해상에서의 선박 및 시추선 등 시설물 테러·점거·검색 상황 시 운용 가능한 해군 특수전 전력 등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아

60) 최봉재, 「중국의 해양력 증강과 한국 해군력 발전 방향」, 50~52쪽.

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북한의 핵위협과 SLBM, 중국의 포함한 주변국 위협에 치명적인 보복능력 및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핵 잠수함 전력 확보에도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림-16> 한국해군 잠수함 현황

주력 잠수함 현황			장보고-Ⅲ 1번함(도산 안창호함)
장보고-Ⅰ·Ⅱ·Ⅲ 제원			
			
	장보고-Ⅰ	장보고-Ⅱ	장보고-Ⅲ
크기	56.4 × 7.6 m	65.3 × 6.3 m	83.3 × 9.6 m
톤수	1200 톤급	1800 톤급	3000 톤급
수중속력	최대 20 kts	최대 20 kts	최대 20 kts 이상
추진방식	디젤/남축진지	디젤/남축진지 +AIP	디젤/남축진지+AIP
무장	어뢰, 기뢰 유도탄	어뢰, 기뢰 유도탄	어뢰, 기뢰 유도탄
승조원	40명	40명	50명
기타	장보고함 등 9척	손원일함 등 9척	도산 안창호
자료: 해군	18.09.14 뉴시스 그래픽, 전지우 기자, 6101c.jc@newsis.com		

또한, 궁극적으로는 현재 운용중인 기동전단의 능력을 확대한 기동함대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항모전단을 확보하여 근·원해에서의 해양영유권 분쟁 등 국가 이익 및 해양안보에 대응하는 전력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⁶¹⁾ 특히, 앞서 언급한 한국 해군의 독자적인 첨단 비대칭 해군력 건설을 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군은 '대양해군'의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원양 작전이 가능한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해군은 2018년 10월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전방위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함 전력화 등과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를 창설하고 항공기 전력 증강·임무 확대에 따라 항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동함대사령부는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며 1개 기동전대에는 이지스함 2척과 구축함, 수송함, 3000t급 차기잠수함, 군수지원함 등이 전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는 먼 바다로 작전 영역을 확대해 해상 교통로와 우리 국민의 자유로

61) 이춘근,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2016-17(지역적·세계적 해양 의제와 한국 해군의 역할)」, 320~321쪽 내용 일부 발췌.

운 해양 활동과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 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는 다양한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무인수상정(USV), 무인잠수정(UUV), 무인항공기(UAV) 등 해양 무인전력을 확보하고, 육상지휘소, 육·해·공 플랫폼 등과 통합 및 원격통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림-17> 한국해군 기동전단



제 33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해군력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바다를 넘어 세계 어디서든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수호하고, 국가보위와 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하며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시대적 소임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1·2·3함대사령부를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1작전사령부로, 기동함대사령부·항공사령부·잠수함사령부를 잠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2작전사령부로 나누는 등 부대개편하기로 했다. 또 해군·해병대의 사단급 입체 고속상륙작전 수행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고속상륙정, 상륙기동공격헬기, 차기 상륙함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신기술에 기반을 둔 '스마트십'을 포함한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다양한 전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스마트십은 정보통신기술을 해군 전투력의 기본단위인 함정에 적용해 작전수행 능력을 최적화하고, 해상 작전부대의 전투력을 높인다는

개념이다. 현재 해군은 7기동전단 1개 기동전단 만을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 운용 중이다. 7기동전단에는 이지스함과 구축함, 수송함, 1800t급 잠수함 등이 있는 소속돼 있다.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을 위해 이지스함(KDX-III·Batch-II) 3척을 추가로 건조하고, 한국형 구축함(DDH-II)과 차기잠수함(KSS-III)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동함대사령부의 작전구역은 한반도와 독도·이어도 등 영유권을 보호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원양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⁶²⁾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동북아에서의 해양 갈등과 충돌 가능성에서 스스로 역제의 효과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며, 무력충돌 발생 시에는 한국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동북아의 안보구조와 지정학적 지형을 고려하여 점차 부상하고 있는 신형 해양강국과 점차 그 영향력을 조정하고 있는 기존 강대국 들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해양안보와 나아가 지역안보를 주도하는 군사적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분쟁지역에 단기간 내에 전력투사가 가능하도록 신속대응 능력을 구비하여 우방국 및 동맹국의 지원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II. 동북아 해양안보에 대응하는 해군기지 확보

제주도 해군 기지가 우여곡절 끝에 2016년 2월 26일 준공되었다. 제주 해군 기지는 1993년 12월 합동 참모회의에서 최초 소요제기 되었고, 2007년에 국방부와 제주도 간의 협의에 따라 현재의 강정항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2010년 1월 항만공사를 착공을 시작으로 6년 2개월 만에 준공식을 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제주 해군기지는 전력적 위치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결정적 기여를 담당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도 당연히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해저 부존자원을 보호, 확보하는 기능이며, 두 번째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야기되는 영유권 및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며, 세 번째는 한국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해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 최적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

62) 오종택, 김성진, 「대양의 꿈 실현한다」,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추진, 뉴시스(2018.10.19.), 검색 주소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19_0000447871&cID=10304&pID=10300.

다는 것이다. 그중 한반도 해역의 주권 보호를 위한 요충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제주 해군기지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기대되는 부존자원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더불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한중관계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어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슈에서 제주 해군 기지의 역할을 아래 그림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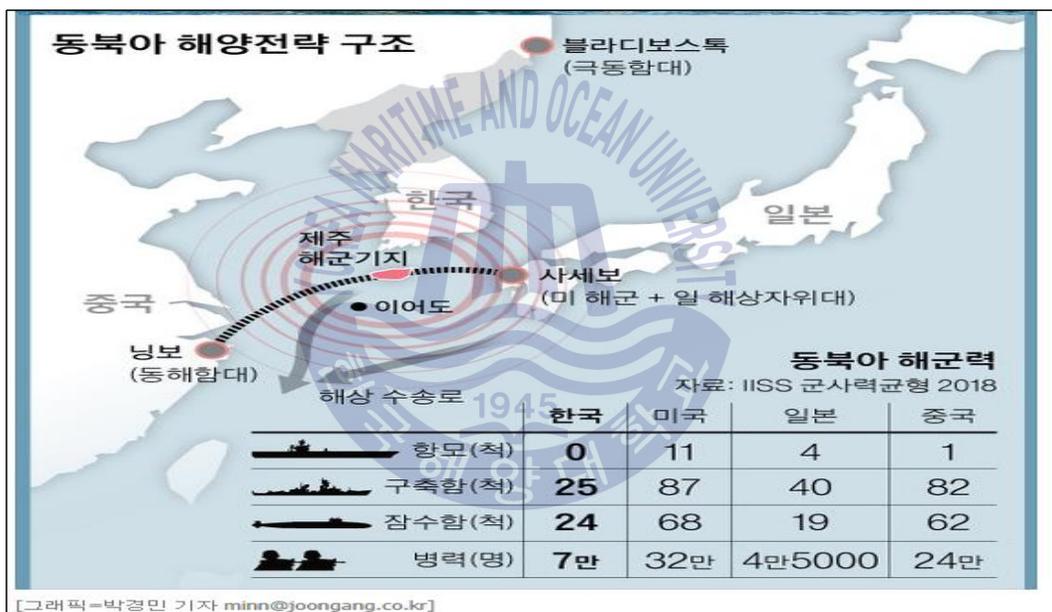
이어도는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이기 때문에 한중간 영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랫동안 이어도를 한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 있는 암초로 인식해 왔고 현재 과학기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의 영토와 같은 지역이다. 중국은 이어도를 자신의 영유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과학기지를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어도가 포함되는 수역의 상공에 항공식별 구역을 설치하는 등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는 행동을 급격하게 늘이고 있다. 중국은 자신이 한국보다 대국(大國)이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는 경우 중간선을 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서해에는 아직 한중 양국 간의 EEZ도 획정되지 못한 상태다.

<그림-18> 이어도와 각 국 주요 해군기지간 거리 및 소요시간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3,000톤급 해양경찰 소속 대형경비함 주박함을 이어도에 상주시키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어도에서 보다 심각한 분쟁이 야기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어도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편이 우세한 입장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다. 중국 동해 함대 기지가 있는 영파에서 이어도까지는 그 거리가 398km로 약 18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에서 이어도까지는 176km로서 8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유리한 기지가 아닐 수 없다.

<그림-13> 동북아 해양전략 구조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과 일본이 해양 분쟁을 벌일 경우에도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기 용이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양국 간의 분쟁에 한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은 그 전략적 위치 때문에 일본과 중국 사이의 분쟁에서 완전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주변국들이 싸울 때마다 한국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895년의 청일 전쟁, 1904~1905년의 러일 전쟁 등은 우리나라가 중립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 그 자체가 전쟁터가 되

였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과 일본이 다투게 될 경우 적어도 우리나라의 영토와 해역이 저들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⁶³⁾

해군은 이어도의 전략적 가치 등을 고려해 제주기지에 7기동전단을 배치했다. 해군에 따르면 이 기동전단엔 세종대왕함(9600t) 등 이지스함 3척과 충무공이순신함급(만재 5500t) 구축함 4척, 잠수함사령부의 214급 잠수함(1800t) 2척 등이 소속돼 있다. 또 제주도에 해병대를 여단급으로 증강했다. 해군은 매달 1~2회씩 함정을 이어도로 보내 경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대륙의 연장이라고 주장하며 이어도 해양기지는 불법이라고 주장한다⁶⁴⁾.

제주 해군기지는 아직도 주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군력의 열세인 우리나라에게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한중일 해역의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잠재적 충돌 지역까지의 출동거리와 시간에서 유리할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해양국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아직은 주변국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열세인 대한민국의 해군력의 취약한 부분을 지정학적으로 상쇄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63) 이춘근,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과 전망」, Strategy 21, 통권 39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8). 151~153쪽.

64) 김민석, 「한반도 생명중과 평화 지키는 거점, 제주 해군기지」, 중앙일보(2018.10.19).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중국은 개혁 후 지난 20여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과 역할도 점차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북아는 물론 세계질서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의지와 ‘하나의 중국’을 국가목표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특히 해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자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력을 비약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의 해양전략을 기존의 수세적 연안방어전략에서 보다 공세적인 적극적 근해방어 및 원해호위 전략으로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는 군사작전 공간의 확대와 해양전략 목표를 확장시켰으며, 자국의 해양권익 보호에 보다 공세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세적인 해양전략 변화는 해양영유권 분쟁 양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이 공세적 해양전략으로 전환한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자국의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과거보다 더욱 공세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러한 공세적인 경향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해양영유권 분쟁 양상 변화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 대륙붕 공동개발, 어업협정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게도 상당한 안보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주변국과의 영토와 해양관할권에 대한 갈등, 해상교통로 확보,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 확보 등을 둘러싼 마찰 등이 관련국들의 지정학적 이익이나 민족주의와 연계되어 무력충돌로 비화될 가능성, 그리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전전에 따른 상호의존성 증대로 인해 국가 간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갈등의 소지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부상으로 중국 스스로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외교력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군사력(특히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현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공세적 해양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해군력이 공세적으로 운용될 것은 자명하다. 중국 해군력 건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해에서 해양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동함대 및 다양한 대미 반접근 능력, 해외 군사기지를 확장 등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이는 유사시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 안보적·경제적·외교적으로 핵심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변국으로서 중국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관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한국과의 영토·해양관할권은 물론 해양자원 등에 대한 분쟁 또는 무력충돌 발생에 대비한 갈등해소 방안과 대응 능력을 동시에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

제2절 결 론

앞서 언급한 중국의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한 공세적 해양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해양안보전략과 해군의 대응방향에 대해 첫째, 동북아 지역 국가 간 협력적 해양안보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셋째로 해양정책 강화와 해군력 증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북아 지역안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통한 안보협력기구는 향후 동북아 국가 간에 전개될 수 있는 갈등과 대립 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며, 역내 국가 간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불신관계를 해소하고,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역내 공동현안을 해결하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다자간 협력적 안보협의체계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주변국들과 다자 차원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중국과 발생할 수 있는 미래안보 위협 및 양자관계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보장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적 부상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위역량, 특히 해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한반도 안정화를 위하여 중국과의

분쟁 발생을 거부하거나 억제하여 분쟁이 군사적인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분쟁규모가 확대되지 않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한 거부적 해양 억제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군 구조 개혁을 통해 국방력의 현대화와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해군전력의 증강과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대양해군을 건설하며 해양으로의 진출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안보적 환경으로 주적인 북한군과의 도발 억제를 위한 국방능력 편중화에 의해 장차 잠재적 위협국가의 부상에 대한 대비책에는 부실한 대응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수립과 지속적인 추진력을 통해 한국군 단독으로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국지 분쟁을 포함한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평시 해상에서의 분쟁을 차단할 수 있는 해군력과 공군력 중심의 전력 증강이 필요하며, 특히 해상에서 장기간 작전 및 대양이라는 환경과 기상에 영향을 덜 받는 대형 함정 위주의 해군전력과 상시 정찰·감시는 물론 필요시 전략적 타격이 가능한 항공·수중·특수전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필요 시 타격과 억제 또는 보복 전력으로서의 효과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시적이고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분쟁발생 가능 해역에 대한 평시 해상정찰과 감시능력을 운영하고, 유사시 해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이 확전되는 것을 예방하고, 분쟁발생 징후 발생 시 기동함대(전단)으로 대표되는 해상전력을 사전에 운용함으로써 군사적 시위를 통한 충돌예방에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로 동북아의 평화 유지와 주변국 간의 '힘의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국제질서와 안보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평화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이다. 현재 중국은 한국과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이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또는 주변국(일본 등)과의 갈등으로 인한 힘의 견제와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당사국과

한국 간에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방과 대응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의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군사력은 해군력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해군력 건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부터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여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월등한 중국의 군사력, 특히 해군력의 증강에 대비하여 우리의 해양권익과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비군사적 대응방안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공감대와 위정자들의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해양력을 강화하고 해군력을 증강하여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종두, 「중국의 해양전략론」, 문명사(2002)

국가전략문제연구소, 「2016 동아시아 전략평가」, 국가전략문제연구소(2016)

국방부, 「2016 국방백서」, 국방부(2016)

국방정보본부, 「2015 중국 국방백서:중국의 군사전략」, 국방정보본부(2015)

박창희외 3명, 「미·일·중·러의 군사전략」,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엮음, 한울 아카데미(2018)

반길주, 「국제 현실정치의 바다 전략」, 해양전략연구소(2012)

윤석준, 「중국 해군력의 현대화와 한국해군에 대한 영향」,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09)

이춘근외 6명,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2016-17」,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16)

한국국방연구원, 「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 동향」, 한국국방연구원(2016)

2. 학술지 및 논문

권정욱, 「중국해군(PLAN)의 현대화 추세와 동아시아 지역의 미·중 해군력 균형 전망」, Strategy 통권43호, 해양전략연구소(2018)

김경민, 「중국의 해양전략」, 통권 88호, 중소기업(2001)

김덕기, 「21세기 중국해군」, 해양전략연구소(2002)

_____, 「미국 해군정보국 보고서를 통해서 본 중국 해군:개괄적 함의」, 제1590호, 한국국방연구원(2015.10)

_____, 「동북아 해군력 군비경쟁」, Strategy 통권43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18)

김정현, 「한국 해군이 지향해야 할 해양전략」, 전투발전연구지(16호), 해군본부(2009)

- _____, 「중국의 해양영토분쟁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해양연구소 (2013)
- 김재민,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2014.2)
- 김주석, 「G2체제에서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양상 분석」, 대한정치학회보(25호), 조선대학교(2017)
- 신경수, 「중국의 군사 개혁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한미동맹의 대응 방향」, 군사논단 통권 94호, 한국군사학회(2018)
- 심석영, 「시진핑 시기의 중국군 현대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2016.12)
- 신용, 「중국 군사력 현대화에 따른 한국안보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 합동참모대학 (2017)
- 신성호, 「한반도 안보상황 전개와 한국의 대응방안」, 2017-8차 KIMA FORUM, 한국군사문제연구원(2017)
- 안덕열, 「중국의 공세적 해양전략 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논문, 합동군사대학(2016)
- 이상국,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주간국방논단(제 1694호), 한국국방연구원(2017.11)
- _____,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군몽 구상과 군사안보적 함의」, 주간국방논단(2017)
- 이춘근,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과 전망」, Strategy 통권39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16)
- 정진근, 「중국의 해양전략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2011)
- 정호섭, 「한국의 해양안보:1998년과 2018년」, Strategy 통권43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18)
- 최봉재, 「중국의 해양력 증강과 한국 해군력 발전방향」, 연구논문, 국방대학교(2014),
- 최영기,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위협분석과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논문, 합동군사대학교(2017)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KIMA Newsletter 제344호」, 한국군사문제연구원(2018)
- 한용호, 「동북아 정세변화와 국가안보 전략」, 정책연구보고서, 국방대학교(2017)

3. 외국문헌

IISS, 2010. *The Military Balance 2011*

IISS, 2010. *The Military Balance 1985~2016*

4. 기 타

김민석, 한반도 생명줄과 평화 지키는 거점, 제주 해군기지, 중앙일보(2018.10.19.), 검색
주소 : <https://news.joins.com/article/23050839>

오종택, 김성진, 「‘대양의 꿈 실현한다’,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추진」, 뉴시스(2018.10.19.),
검색주소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19_0000447871&cID=10304&pID=10300

이우승, 「중국 해군굴기 박차, 초대형 강습상륙함 건조 착수」, 세계일보(2017.3.21.), 검
색주소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330003565>